

2022년 6월 유신군사독재50년·6월항쟁 35주년 심포지엄

6월항쟁의 성과와 이월된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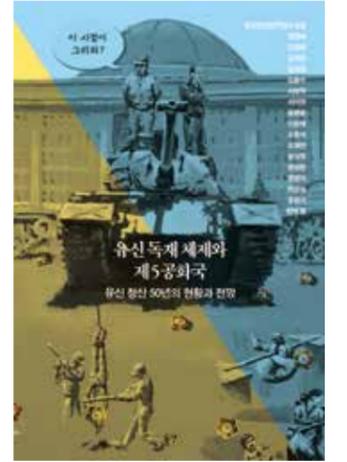
일시 : 2022년 6월 22일(수) 오후 2~5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이 시절이
그리워?

주최: ~~SK~~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유신50년군사독재청산위원회
(상임대표 김재홍·공동대표 김준범 / 국회의원 이학영·인재근·소병훈·이용선·강은미 /
김교흥·김영배·김홍걸·노웅래·설 훈·양경숙·양정숙·윤미향·윤준병·정필모)

주관: 유신청산민주연대

(강제징집복합화선도공작진실규명추진위원회 /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 늦봄문익환목사기념사업회 /
민주·인권·평화를 실천하는 긴급조치사람들 /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 서울민예총 / 이한열기념사업회 /
자유언론실천재단 - 동아투위·조선투위 / 장준하정신선양회 /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 / 전태일재단 /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 평화어머니회 / 평화와 통일을 사랑하는 예술인들 / 한국작가회의 / 4.9통일평화재단 /
70년대민주노동운동동지회 - 청계피복·동일방직·원풍모방·콘트롤데이터·YH 노동조합 외 /
71동지회 /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 NCCK(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외)



1부: 출판기념회

사 회	이대수 (유신청산민주연대 운영위원장)
인 사 말	이학영 (국회의원)
축 시	유신의 아픈 추억을 넘어 - 박몽구 (시인·긴급조치사람들 회원)
책 소 개	김영호 (동연출판사 대표)

2부: 심포지엄 - 6월항쟁의 성과와 이월된 과제들

사 회	이대수 (유신청산민주연대 운영위원장)
인 사 말	김재홍 (유신50년청산위원회 상임대표) 강성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상임 부이사장)
축 사	인재근 (국회의원)
기조강연	박정희 유신-5공 전두환 독재는 극복되었는가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발 표 1	유신독재를 '청산' (?)한 6월 항쟁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
발 표 2	군사독재 사령탑 보안사와 정치군벌 하나회 김재홍 (서울미디어대학교 석좌교수)
토 론 1	조종주 (강제징집 녹화선도공작 진실규명추진위원회 사무처장)
토 론 2	이창훈 (민주유공자법 제정추진단 총괄실장)
종합토론	참가자



1부 : 출판기념회

「박정희, 전두환의 유신 군사 독재」의 출판기념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회의원 이학영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군포시 국회의원 이학영입니다.

유신청산 시리즈 세 번째 책 「박정희, 전두환의 유신 군사 독재」의 출판기념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이를 출산하는 것으로 비유될 만큼 송고하게 여겨지는 책 출간의 자리를 함께 축하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랜 산고 끝에 훌륭한 책을 세상에 내놓아주신 김재홍·김춘수·서보학·오동석님 외 공동 작가 여러분과 출판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존경의 박수를 보냅니다.

올해로 10월 유신이 발표된 지 꼭 50년이 됩니다. 1948년 제정된 제헌헌법을 짓밟고 그 효력을 정지시키며 국회를 해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국으로 이끈 유신 군사 독재의 청산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민주주의의 불빛을 꺼뜨렸던 유신의 잔재를 뿌리뽑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 등의 제도 개선 이전에 유신헌법의 제정부터 선포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의 불법성을 선언하고 공론화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이 세상에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고 강력합니다.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 독재 정권의 파렴치한 위법·위헌행위를 만천하에 고발하고 이 불행한 역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그 뿌리까지 들어내자는 것입니다.

유신50년청산위원회의 대표의원으로서 세계는 과제와도 같은 책의 출판이 참으로 기쁘고 마음 한켠이 무겁습니다. 몇 번이고 다시 읽으며 자유를 갈망하던 우리의 목소리를 기억하겠습니다. 또, 그 기억으로 우리의 입과 귀를 막고 자유를 억압하던 그때의 검은 손들을 세상에 던져 그 실체를 낱알이 공개하고 역사 부정과 왜곡행위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책의 출판을 위해 애써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귀한 시간 내시어 참석해주신 여러분께도 진심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2022년 6월22일

유신의 아픈 추억을 넘어

박몽구(시인·긴급조치사람들 회원)

이 사람을 보라
 목젓 너머 간절하게 숨겨둔 말
 단 한번이라도 마음놓고 털어놓기 위하여
 땀 흘려 일한 만큼
 합당한 대가를 받는 세상을 위하여
 그는 미련 없이 거짓의 책을 던졌다
 앵무새들 넘치는 마이크 던지고
 숨김 없이 다른 목소리 낼 수 있어야 한다고
 파지가 된 신문을 불태웠다
 제비 같은 식구들 입이 걸린 일터에서
 죽음 같은 구타 끝에 빈손으로 쫓겨나면서도
 몸을 던져 마침내 깨끗한 새벽을 연 사람
 비록 육체의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지만
 사십 년이 지나도 여전히 청년인
 우리들의 아픈 자화상을 보라

겨레불이들이 흘리는 피눈물 모른 채하면서
 장부를 조작하여 비밀금고만 불리고
 제국의 무자비한 무기가 갈라놓은 땅
 하나로 만들 꿈이라곤 팽개친 채
 제국의 충견이 되어 바쁘던 사람
 총칼을 숨긴 방패 뒤에 숨어
 제 살길만 도모하던 매국노들
 가족의자에서 끌어내린 지 40년
 그 사이 세상은 얼마나 바뀌었는가

머리카락 흘날리던 가발공장 밀집지에서
 매끄러운 구로 디지털 단지로 바뀌었지만
 쥐꼬리만 한 월급은 여전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은 더욱 시계 밖으로 멀어졌다
 한 사람의 손가락 가리키는 대로 돌아가던 세상
 검은 장막은 끌어내린 것도 잠시
 동서의 장벽 더욱 높아지고
 제국의 입김 더욱 은밀하고 뜨거워졌다
 고춧가루 물고문 통닭구이 되어 망가진 청년
 돌려받을 길 코르크마개처럼 닫혀 있다

추억을 넘어 아픈 기억 더욱 깊어진 시간
 내시가 되어 권좌를 떠받들던 벼슬아치
 그 후예들은 이제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일하지 않고도 갈수록 집을 늘리고
 은밀하게 통장을 불리는 사람들
 온몸을 다해 국토를 지키고
 제국의 거친 발을 받아낸 사람에게
 고개 숙이고 배상해야 한다
 잘못 기록된 역사 바로잡는 데
 아낌없이 청춘을 던진 증인들
 깊은 상처 딛고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거짓 민주주의의 가면 벗기고
 다 함께 잘 사는 대동세상
 한라에서 백두까지 활짝 열어젖혀야 한다



2부 : 심포지엄
6월항쟁의 성과와 이월된 과제들

박정희가 유신을 선포한지 50년



김재홍 유신50년청산위원회 상임대표

올해 2022년은 대통령 박정희가 유신을 선포한지 50년 되는 해입니다만 그로부터 시작된 유신1,2기 군사독재를 종식시킨 1987년 6월 시민항쟁이 승리한지 35주년을 맞아 뜻 깊은 해입니다. 우리 현대사에서 의미가 큰 시간적 계기를 맞아 유신청산민주연대는 유신군사독재50년청산위원회를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발족하여 유신청산특별법 입법 추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입법에 앞서 국회의 유신청산 결의안도 추진 중입니다.

유신독재는 한마디로 5.16쿠데타 이후 중앙정보부와 군 보안사를 이용하여 정보공안통치를 노골화한 1인중심 종신집권 체제였습니다. 중앙정보부와 보안사가 정부는 물론 모든 주요 민간영역에서 정보수집을 명목으로 조정 통제했습니다. 그들의 행위 기준은 1인 통치자를 보위하는 친위대 의식이었습니다. 국가정보공안기관으로서 국민과 공익을 위해 일한다는 공직자 의식은 뒷전이었습니다. 정부 내각의 장관 간담회 등에서도 중앙정보부장이 조정 통제역을 맡았습니다. 그 중앙정보장들은 박정희-전두환-노태우 정치군인 대통령이 집권한 32년 동안 19명 중 14명이 군 출신이었습니다. 군 보안사와 중앙정보부가 실질적 군사독재의 도구였습니다. 군 부대인 보안사까지도 정보처에 정치과, 경제과, 언론과, 학원과, 종교과를 설치해 민간 영역에 정보원을 상주시키고 민간인 사찰을 감행했습니다.

우리 현대정치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12.12 군사반란과 5.17 내란은 보안사의 지령 공작이 그 핵심 배경임은 명백합니다. 5.16은 무혈 쿠데타였고 12.12는 군 내부의 총격이었으나 5.17은 군대가 국민을 향한 발포와 무자비한 폭력을 자행한 내란이었습니다. 아직도 진상규명이 끝나지 않았지만 군의 폭력행동의 배후에 보안사가 개재돼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보안사의 핵심 지휘부에 사령관 전두환을 위시해 정치군벌 하나회가 포진해 있었습니다.

1980년대 말까지 각종 연구단체들이 실시한 정치 사회 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정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집단은 언제나 군부가 1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많은 직업군인들이 친척 친구들을 만나러 나갈 때 군복 임기가 꺼려진다고 토로했던 것이 이 시기였습니다. 시민사회로부터 눈총을 받고 따돌림 당하는 것을 피부로 느낀 것입니다. 국민 속에서 군의 명예는 군이 민주적 가치를 얼마나 존중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군의 명예가 실추된 원인

은 두말할 필요 없이 12.12군사반란과 5.18광주항쟁 살상진압이었습니다. 소수의 정치군인이 권력을 장악했지만 시민사회의 민주규범을 파괴하고 패륜행위까지 저질러 다수의 직업군인들에게는 깊은 불명예의 뿌리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군의 정치개입을 방지하는 개혁도 이제 정부나 외부가 아니라 군 내부에서 묵묵히 일하는 다수의 야전 직업군인들이 나서서 발언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의미가 클 것입니다. 다만 조직화된 소수가 비조직화된 다수를 지배하는 반민주적 행태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정치군벌 하나회와 같은 사조직을 철저히 타파해야 할 것입니다.

군사독재로 인한 군의 불명예가 치유되는 것은 과거사 진상규명과 청산 노력의 성과였습니다. 하나회 숙군과 기무사 개혁이 이루어진 1990년대 들어서 군부는 한국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국회의원이나 재벌이나 학생운동세력 등의 다음 순위로 밀려났습니다. 군부가 그동안 정치 사회적 관심과 발언을 자제함으로써 국민의 눈에 띄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군부가 내부지향적으로 본연의 임무수행에 눈 돌리고 불미스런 과거사에 대해 자성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군부의 그런 성찰적 모습은 일시적 후퇴였는지 2017년 촛불집회 때 기무사가 또 다시 정권의 친위대 고질병을 드러냈습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고도의 민주정치 과정에 대해 계엄령 검토와 함께 주요인사 체포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촛불집회와 국회 의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민주적 절차와 정반대로 오로지 대통령 친위대로서 임무수행을 준비한 것입니다.

유신50년군사독재 청산을 위해 군의 정치개입의 아지트 노릇을 해 온 군사정보사정 기구가 과거 체질과 습성을 버리고 환골탈태해야 합니다. 국민을 위한, 국민의 군대로 거듭 태어나고 확고히 정치 불개입의 규범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오랜 군사독재의 유전자를 깨끗이 씻어내는 미래지향적 과거사 청산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6월22일

6월 항쟁의 성과와 이월된 과제 심포지엄 서면 인사말



국회의원 인재근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인재근입니다.

오후에는 찌는 듯 덥다가도 밤이면 기온이 크게 떨어지곤 합니다. 무더위와 큰 일교차에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6월과 잘 어울리는 심포지엄을 함께 주최하게 되어 기쁩니다. 행사를 준비해주신 유신50년 군사독재청산위원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회와 강연, 발표와 토론으로 심포지엄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35년 전 6월이 아직 생생합니다.

거리를 가득 메운 시민들의 모습과 함성을 생각하면 지금도 전율이 돋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는 천지를 울렸지만 공격적이지 않았고, 그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차갑지 않았습니다. 자동차 경적을 울리고 가게 간판을 바꾸며 항쟁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손길은 작았지만 가볍지 않았습니다.

6월 항쟁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한 획을 그었습니다.

전두환 군사정권의 항복을 이끌어 냈습니다. 대통령 직선제와 평화적 정부이양을 얻어냈습니다. 무엇보다 큰 성과는 국가의 주인이 국민임을 확인한 것입니다. 권력은 결코 국민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정부와 권력이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할 때마다 두려움 없이 일어섰고 목소리를 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6월 항쟁의 성과 이면에는 분명한 한계와 추후 과제가 있습니다.

일례로 1987년 대선 당시 김대중, 김영삼 후보의 단일화 무산은 노태우 후보의 당선으로 이어졌고 군부의 잔재를 남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시민의 피와 땀으로 쟁취한 대통령 직선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발전시켰지만 더 성숙하고 확장된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한 책임과 역할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오늘 심포지엄이 그 제목처럼 6월 항쟁의 의미와 성과를 다시 새기면서도 2022년 현재에 던지는 과제와 물음에 답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저 역시 국회의원이자 민주화의 발전을 경험한 한 사람으로서 다음 세대에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를 바르게 전달하고, 또 보완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6월22일

기조강연

박정희 유신-5공 전두환
독재는 극복되었는가

이부영(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박정희 유신-5공 전두환 독재는 극복되었는가



이부영(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1. 들어가는 말

<유신 독재체제와 5공화국>에 관한 여러 차례 학술회의를 거치고 이렇게 종합학술회의를 여시는 여러 학자들과 활동가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우리 사회에서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박정희와 전두환 군사독재자들의 치적에 대해서는 이미 평가가 내려졌는데 이처럼 각 분야 별로 정리하시는 것은 뒷 세대들에게 총론과 함께 각론까지 남겨주려는 뜻으로 알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1961년에 대학에 입학, 4월혁명의 찬란한 푸르른 자유를 잠시 맛봤지만 곧 5.16군사쿠데타로 짓밟혀버린 검은 기억을 지니고 살고 있다.

5월 17일 오전 교정에는 5월의 짙은 라일락 향기가 진동하고 있었는데 교문 입구에는 기관총좌 2문이 자리잡고 학교에 들어가려는 모든 사람의 신분증을 내보이라고 요구했다. 우리 같은 물질 모르는 신입생들만 교정에 어정거리고 선배들과 교수들은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다. 어디론가 사라졌다.

4월 혁명의 푸른 꿈은 그렇게 군대와 기관총이 짓밟아 버렸다. 군부 쿠데타는 그래서 우리에게 악몽으로 머리속에 새겨지게 되었다. 60여 년의 긴 세월을 사는 동안 깊게 새겨진 몇 가지를 기조강연을 빌어 말씀드린다.

반공 제1주의를 앞세우고 등장한 박정희 군사정권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전개되기 시작한 미국-소련 냉전시대에 열전으로 터진 한국전쟁의 필연적 결과물이라고 해야겠다. 유럽에서 세계대전의 연합국이었던 미국과 소련이 동서독의 분단과 함께 유럽 전체를 분단하여 대결

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공산화되는 것을 분기점으로 전범국 일본을 주축으로 대공산권 전선을 강화해갔다. 미국의 세계전략 지침 속에서는 분단된 한반도의 남쪽 한국은 대공 전선의 최전선으로 봉사하도록, 미군 기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되고 있었다. 미국은 한국을 세계대전의 연합국 당사자로 인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정부수립 이후에도 민주공화국, 자유정치 체제를 유지하고 공고화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초강대국 미국에 대한 소련과 중국의 이념공세를 저지하기 위해 미국은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군사쿠데타를 통한 반공체제 구축을 시도했다. 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에 군사쿠데타가 잇따랐고 쿠바에 카스트로 정권의 등장 이후에 그에 대응하기 위해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볼리비아 등에도 군부정권이 들어섰다.

2. 박정희 독재와 5공 독재도 자주적이었을까

미국 정보기관의 요청으로 중앙정보부의 창설안을 장면 정권 당시 이후락 장군(후에 중앙정보부장 역임)이 기안했다. 그 때문에 그는 5.16쿠데타 이후에 잠간 수감되었다가 풀려났다. 그는 곧 5.16세력의 권력주체인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비서실장으로 발령됐다. 그는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을 감시하는 자리에 앉았다.

박정희의 중앙정보부는 4월혁명 기간 한 해 동안 터져나온 남북교류론, 통일론, 중립화통일론 등 사회운동과 학생운동을 철저히 탄압했다. 5.16 쿠데타로부터 1987년 민주화 이후까지, 탈냉전 시대가 오기까지 모든 통일론, 남북교류론, 중립화론은 침묵을 강요당했다.

1972년에 발표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3대 원칙에 근거한 7.4 남북공동성명도 이후락을 특사로 파견해야 했다. 미국의 철저한 통제 아래 진행된 남북 지도자 사이의 합의였다. 그 성명은 남북권력자의 권력강화에 이용되고 말았다. 미국과 중국의 접근에 위기를 느끼는 박정희에게 유신권력을 선물했다.

1974~75년은 박정희의 유신독재가 종교인, 지식인, 학생들의 저항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었다. 미국은 월맹과 베트남 파리종전협상을 진행하면서 마지막 협상 장소를 중국의 베이징으로 정했고 1975년 1월 하순 베트남 미군철수일정을 박정희에게 미리 통보했다. 박정희는 구속됐던 주요 정치범 150명을 2월 15일 석방했다. 자유언론운동을 벌이고 있던 동아일보 기자 130여 명도 강제해직시켰다. 4월 1일부터 30일까지 베트남이 공산화되었고 박정희는 한국에서 전국적인 반공궐기대회를 열어 정치적 반대 열기를 잠재웠다. 미국의 베트남 포기가 한국의 독재자 박정희를 구했다.

박정희 유신정권이 영호남을 대표하는 김영삼, 김대중 두 야당 지도자들을 탄압하자 다시 정치적 위기가 조성되었다. 1979년에 격렬하게 벌어진 부산-마산민주항쟁은 10.26 박정희 피살로 정권을 끝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 군부 안에 육사 11기(정규육사 1기)를 정점으로 하는 이른바 KMA그룹을 양성해왔다. 그들이 나설 준비를 완료하고 있었다. 김대중의 구속수감은 광주의 격양된 시위를 불렀고 한국사의 비극인 광주학살로 이어졌다. 5공 군부의 등장에 주한 미군사령관 존 위컴은 “한국인은 들쥐 lemming 같아서 지도자가 세워지면 따른다”고 발언하여 광주항쟁 진압에 공수특전단의 파견을 승인했다는 확신을 한국인들이 갖도록 했다. 한국에서 본격적인 반미의식이 일어났다.

3. 1987년 대선의 兩金 분열과 노태우 당선이 민심이었을까

1980년대 중반, 소련방의 약화와 동구권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등의 자유화 물결은 탈냉전과 탈이념을 대세로 만들었다. 이런 조건 속에서 전두환 정권은 학생 시위에서 “미군철수! 독재타도!” 구호들이 나와도 1980년 광주항쟁을 진압하던 가혹한 방식을 택할 수 없었다. 탈냉전 추세 속에서 미국의 동아시아정책은 한국민의 요구인 직선제 민주개헌을 받아들여 군부세력의 온건파가 집권하여 큰 현상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이 최상의 선택지였을 것이다. 그 선택지의 필수조건이 김대중-김영삼의 분열이었다. 그런데 양김 진영은 그 선택지를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양김은 단일화하지 않아도(4자입 후보 필승론) 자신이 승리한다고 확신하는 태도를 보였다.

1987년 대통령 선거의 조건은 한국의 역대 대통령 선거 가운데 군부정권과 그 지지세력이 명분과 세력에서 최초로 열세에 몰려 있었다. 위에서도 지적했듯이 국제정세에서도 동유럽 사회주의 진영이 내부의 모순과 저항 때문에 제대로 탄압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미 광주학살로 세계적 지탄대상이 된 전두환 정권이 다시 가혹한 민주세력 탄압으로 정권을 이어가는 것을 미국으로서도 지지할 수 없었다. 한국 내부에서 남북관계 개선 등을 통한 현상변경을 막기 위해서라도 온건 군부세력으로 민주선거를 통해 정권을 이어가려면 양김 분열은 반드시 성사시켜야 했다.

4. 한국은 중-러와 수교했는데 조선의 미-일과의 수교는 왜 막혔나

노태우 정권은 1989년 남북의 평화공존을 골자로 하는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통일정책으로 결정했다. 전쟁을 전제하는 이승만 정권의 북진통일정책을 통일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면, 한국의 역대정권 가운데 평화를 내세우는 통일정책을 천명한 것은 노태우 정권이 처음

이었다.

1988년 미-소 양진영이 모두 참여하는(북한만 불참) 서울올림픽을 개최한 데 이어 동유럽 구 사회주의 국가들과 수교를 이어가던 한국은 1990년 러시아, 1992년에 중국과 수교에 이르렀다. 한국이 러시아-중국과 수교를 맺는 1990년과 1992년 사이 1991년에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하는 일이 벌어졌다. 한국이 러시아-중국과 수교협상을 벌였다면 조선도 당연히 미국-일본과 수교를 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을까. 한국에서는 1992년 연말에 김영삼과 김대중이 대결하는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었다. 한국이 러시아-중국과 수교가 성사되었고 남북한이 동시유엔가입이 성사되었다면 미국과 일본 사이에, 그리고 미-일과 한국 사이에서도 조선과 미-일의 수교문제가 논의되지 않을 리가 없었다. 그런데 미국과 일본이 조선과의 수교를 거부했다. 미국은 폴란드 루마니아 체코슬로바키아 등에서 진행되는 체제변화 바람을 지켜보면서 조선과 중국에서도 자유화 바람이 일어나는지 주시하고 있었다.

사실상 한반도에서 평화를 지켜가고 대화를 이어갈 주체는 한국이었다. 당시 독일이 통일을 성취해가는 과정이었으므로 한국도 흡수통일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없지 않았다. 1992년 12월에 치러지는 김영삼-김대중 대선에서는 한반도 미래 문제로서 미국과 일본의 조선과의 수교 문제가 전혀 제기되지 않았다. 언론에서도 의미있게 취급되지 않았다.

이 문제를 여기서 살펴보려는 까닭은 남북유엔동시가입이 성사되었고 한국의 중-러와의 수교가 성취되었다면, 한국이 북한과 평화를 유지하는 가운데 남북관계를 선순환으로 풀어가려는 의지가 있었다면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국민의 뜻을 결집하는 토론을 벌였어야 했다. 한국 안에서는 당시 서독이 동독을 흡수통일하는 과정에 더 관심을 보였다 할 수 있다. 한국 당국자 가운데 미국과 일본 정부에 조선과의 관계개선, 수교협상을 종용한 사례가 있는지, 한국정부 내부에 그를 위한 태스크포스 팀이라도 구성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남북한 중심으로 한반도 문제를 자주적으로 풀어갈 의지가 있었느냐의 문제다.

5. <유신-5공 독재>에서 지배적인 논리인 남북분단의 유지, 더 나아가 한반도 대결논리의 불변 상태가 지속되는 것 아닌가.

2020년까지만 해도 한국은 식민지 노예 처지를 거친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민주화-산업화를 성취하면서 선진국으로 진입할 뿐 아니라 세계문화를 선도하는 유망한 국가가 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미국의 바이든 정권이 미국 자신이 세워놓은 자유무역 질서를 무시하고 중국과 러시

아를 무역질서에서 추방하려고 함으로써 다시 신냉전 시대로 퇴행시키고 있다. 동아시아에서도 미국은 중국의 미국 추월을 저지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가치동맹을 쿼드라는 이름으로 강요하고 있다. 동북아시아에서는 조선에 대한 제재를 극한으로 몰아부쳐 조선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중국과 조선을 가두는 군사전략으로 미-일-한 군사동맹을 강요하고 있다.

신냉전시대에 발맞춰 한국에 등장한 신보수정권은 이전 정권과는 정반대로 한반도에서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자세를 천명하고 대북 선제공격론,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론 등을 내세우고 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뒤로 물러섰던 군사독재의 후예들이 기득권을 물려받고 신분을 세탁하여 박정희-5공의 논리를 다시 불러내고 있다. 야당으로 물러선 민주개혁세력에게서는 '전쟁불사, 공존불용'의 저지 방안이나 그 대안들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유신독재를 ‘청산’(?)한 6월 항쟁

김동춘(성공회대 교수)

유신독재를 ‘청산’(?)한 6월 항쟁

김동춘(성공회대 교수)

1. 유신체제의 성립 배경

1969년 미국의 닉슨 독트린 선포와 동서 데탕트 분위기 조성 직후 발표된 박정희 대통령의 8.15 선언은 이제 남한이 북한의 존재를 인정하고 한국과 북한이 오픈서버 자격으로 유엔에 동석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겠다는 획기적인 선언이었다.¹⁾ 이후 1972년의 7.4 남북 공동성명과 남북한 간 대화 개시는 그 이전까지의 남북한 간의 냉전적 대립 상황에서 이제 외교 경제 차원의 경쟁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박정권은 10월 유신 직전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7.4 공동성명은 남북화해를 지향하는 것이었고, 그것은 냉전 하의 각종 적대적 법령의 개폐를 전제로 성립할 수 있는 성명이었다.

7.4 공동성명 이후 박정희의 모든 담화는 북한을 대화 상대이자 동시에 경쟁의 상대로 설정하였다.²⁾ 유신체제 이후 박정희의 모든 연설에서 제1위는 ‘조국통일이었다’.³⁾ 국력의 조직화, 능률화와 효율화, 자주 국방, 중화학공업화, 수출 10억불 달성 등 1972년 유신체제 이후 모든 박정희 정권의 구호는 모두 북한을 압도할 수 있는 국력의 배양, 대북 경제전을 의식한 것이다.⁴⁾ 특히 휴전 이후 처음으로 북한을 대화 상대 국가로 인정하되 북한과의 체제 대결에서 주도권을 쥐겠다는 생각이 깔려있다. 박정희 정권이 경제성장을 거의 국가의 신앙처럼 강조한 이유도 냉전 이완의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 냉전 이념이 흔들리자, 새롭게 변

1) 유신정우회, 『위대한 전진 - 유신 6년간의 발자취』, 1978

2) 1972년 7.17 제헌절 기념식에서도 박정희는 “이것이(이후 10월 유신으로 선포하게 될 내실에 있어 짜임새있고 능률적인 민주주의) 남북대화에 있어 우리의 민주체제가 공산독재체제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것을 실증하는 동시에 우리의 체제가 공산체제와 대결하여 승리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밝혔다.

3) 김행선, 『박정희와 유신체제』, 선인, 2006, 64쪽

4) 정광민, 2012:314-316

화된 국제 질서 속에서 남북 경쟁이라는 변화된 국면에서 우위에 서려는 의도의 표현이었다.⁵⁾

그러나 곧 이은 10.17 비상사태 선언은 비상계엄, 헌법개정, 대통령 권한 강화 등 오히려 냉전을 명분으로 하여 1인 체제를 강화시키는 것이었다. 즉 남북대화는 통일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권력 강화를 위한 ‘정치적 최면술’이었다는 지적도 이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⁶⁾ 즉 유신체제는 긴장해소 평화공존이라는 국제정치의 흐름과도 배치되는 것이었고, 몇 달 전에 발표한 7.4 공동성명의 정신이나 방향과도 상반되는 것이었다. 유신 체제는 7.4 공동성명에서 제기한 민족과 통일을 가장 큰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것은 통일에 대한 아무런 구체적 방안도 내놓지 않았던 과거의 정권의 방침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다.

결국 남북적십자 회담,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의 비밀 대북 방문, 7.4공동성명 등 일련의 대북 대화와 ‘통일 담론’ 제창은 박정희 정권의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유신헌법에서 박정희 대통령 선출의 거수기 역할을 한 ‘통일주체 국민회의’ 설립, 1973년 6.23 ‘평화통일 외교정책에 관한 특별선언’의 ‘통일’이 들어간 것이 보여주는 것처럼, 박정권은 남북대화나 통일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 하였다. 김대중은 통일을 사칭해서 자신의 독재적 영구집권을 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중 국교 정상화 등 냉전체제의 이완이 같은 분단국가인 동서독에게는 상호 교류 확대로 나아갔으나, 남북한은 그 반대의 길로 갔다. 7.4 공동성명 이후 남북한에서 더욱 경직된 일인 체제가 동시에 수립된 것은 남북한의 ‘적대적 공존’을 잘 드러내준 사실이다. 박정희 정권은 말로는 국가안보를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10월 유신 선포를 북한에 미리 알렸고,⁷⁾ 같은 해 남한은 물론 북한도 김일성 지배체제를 강화하는 사회주의 헌법을 통과시켰다. 박정권은 1973년 가을부터 본격화된 국내의 반유신 운동을 훨씬 더 강경하게 탄압하고 최종길 의문사, 유럽거점 간첩사건 등 더욱 강경한 반공주의 정책을 폈다. 대북 교류에 진정성이 있으면 당연히 내부의 체제비판자들에 대해 유화정책을 펴야 했으나 그 반대의 행동을 했다.⁸⁾

박정권은 경제성장과 국가안보를 정당성의 두 축으로 삼아서 지배질서를 유지하였다. 박정희는 민정이양 직전에 쓴 국가와 혁명과 나, 우리민족의 나아갈 길 등의 저서에서 근대화에 대한 자신의 포부를 밝힌바 있다. 그는 한국 근대화의 과제를 반봉건적.반식민지적 잔재로부터 민족을 해방시키는 일, 빈곤으로부터 경제적 자립을 이룩하는 일, 기형적인 관권 의존의 경제와 불로소득의 양반경제 관념 및 민중의 숙명관 극복, 진정한 민주주의의 재건

5) 1971년부터 1975년까지 남한은 12개나라, 북한은 53개 나라와 새롭게 수교했다.

6) 김형욱의 지적.

7) ‘10월 유신’ 안보 내세우더니...박정희 정권, 북에 두 차례나 ‘사전 통보’, <한겨레신문>, 2012.10.17

8) 박찬웅, 『박정희 전두환의 난』, 3, 1972년, 아우내, 1980

등으로 요약하였다. 한편 5.16 쿠데타의 주역인 김종필은 “근대화란 산업의 공업화요, 생활의 합리화요, 정치의 민주화”라고 풀이하고 있다.⁹⁾ 지배적인 담화인 근대화는 양적 경제 성장의 추구, 서구 자본주의의 발전 모델의 추종, 국가주도의 국민동원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2. 유신체제의 성격

유신체제는 통치의 방법에서는 명령과 폭력으로, 그것을 정당화한 이데올로기로는 반공주의와 성장주의 한국적 민주주의를 내용으로 한다.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국민적 유기적 일체성을 강조한 국민총화의 논리에 기초해 있다.

1) 이중국가(Dual State) 체제 하의 간첩 만들기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이후 곧바로 결성된 중앙정보부는 대통령의 직접 지휘를 받는 ‘국가 내의 국가’, 정부 위의 정부로서 역할을 했지만, 1972년 유신 이후 그 정도는 더욱 심해져서 사실상 모든 정치, 사법, 학원, 언론, 노동 영역에까지 중앙정보부 활동은 확대되어, 모든 정부기관과 지방행정기구를 압도하는 최고의 권력기관으로서 역할을 했다. 중앙정보부는 국군 보안사와 더불어 거대한 ‘그림자 정부’였고, 이 두 기관은 일제시기 독립운동가들을 잡아서 고문하던 악명 높은 일제 특별고등경찰(특고:特高)의 후예였다. 유신체제는 독일의 나치 하와 유사하게 이중국가, 즉 공안기관이 통상의 국가 위에 있었다. 1971년 사법파동 이후부터 중앙정보부는 ‘조정’의 이름으로 판결에 개입하였는데 특히 긴급조치 위반, 반공법 위반 사건 등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노골적으로 개입하였다. 긴급조치 2호 10항은 “중앙정보부장은 비상군법회의 관할사건의 정보, 수사 보안업무를 조정 감독한다.”라고 하여 중앙정보부가 긴급조치 관련 재판에 개입할 길을 열어 놓았다. 중앙정보부 요원은 검찰 수사 과정에도 입회를 해서 피의자가 고문에 의한 진술을 부인하면 중앙정보부에 다시 보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러한 관행은 1987년까지 계속되었다.

또한 중앙정보부는 언론과 노동 분야에도 깊이 관여했다. 박정희는 언론담당 조정반을 중앙정보부 내에 설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¹⁰⁾ 동일방직 사건 등 70년대 노동 사건에는 어김

없이 중앙정보부가 개입하였다. 당시 중앙정보부 요원은 회사나 산별노조 사무실에 거의 상주하였고, 경찰은 중앙정보부의 심부름을 하는 존재에 불과했다.¹¹⁾ 모든 보고서가 청와대에 중앙정보부에 직접 올라갔고, 그들에 의해 정치적, 정책적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중앙정보부와 청와대는 동일방직 등 노조관련 해고 노동자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배포함으로써 노동운동 관련자들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배제시키는 작업에도 직접 개입하였다. ‘비상사태’가 선포된 상태에서 사회영역 특히 언론이나 노동까지도 공안 개입 영역이 되어 단순한 노조 결성이나 노동쟁의도 공안 사안으로 간주된다. 즉 좀도둑조차 비첩(匪諜)이 될 수 있었다. 모든 구성원이 ‘적과 나’로 이분화 되는 ‘국민총화’ 절대 가치 국가서 단순한 생존권을 위한 노동자와 농민의 요구도 간첩행동이 될 수 있다. 71년 광주대단지 사건 당시 체포된 사람들이나 이후의 노동쟁의, 농민의 저항도 모두 간첩 잡는 것을 임무로 하는 ‘공안’부서 담당사건으로 취급되었으며 주모자들은 빨갱이로 몰렸다.¹²⁾

이러한 ‘공안 사범’에 대한 재판과 처벌은 당사자 뿐 아니라, 그것을 목격하거나 보도를 통해 보고 듣는 국민들을 규율하는 효과를 가졌다. 즉 ‘박’의 존재, 간첩에 대한 공개적 범주화와 낙인, 그리고 ‘박’의 존재에 대한 철저한 비인간화와 공공연한 테러의 양상을 지닌 가혹한 처벌은 ‘안’의 사람들을 공포로 질리게 하여 복종을 유도하는 효과를 가졌다. 안과 박의 정치적 경계선이 명확해지면 ‘박’의 존재에 대해서는 책임감과 동정심을 느낄 필요가 없어진다. ‘박’의 사람들, 즉 간첩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자수’라는 방법을 통해, ‘귀순’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안’, 즉 정치공동체 내로 들어오도록 강요당한다.

안보 위기 하의 권력은 적에 대해 극도의 공포감을 갖게 되고 그것은 내부의 적, 잠재적 적에 대한 공공연한 색출 작업을 시도한다. 그런데 밖의 적의 위협이 줄어들면, 내부의 적을 밖의 적만큼이나 위협한 존재로 격상시켜 위기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69년 이후 북한의 간첩 남파가 줄어들면서 남파간첩들이 정권이 원하는 대로 검거되지 않았다. 그러자 박정희 정권은 간첩을 ‘정책적으로’ 양산하기 시작하였다. 급기야는 정치적으로 회색 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간첩으로 조작한 다음, 그들에게 처벌을 가해서 국민적 공포를 조장하며, 간첩의 위협을 온 사회에 일상적으로 유포하고 또 그것을 기정사실로 만들어 모든 사회구성원을 상호 감시하게 만드는 일까지 저지르게 된다.

중앙정보부와 같은 공안기관이 멀쩡한 사람들이나 약간이라도 의심되는 행동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정치공동체의 적’, 혹은 범죄자로 조작해 내고 그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국가 범죄행위다. 국가가 단순히 ‘적’을 적발하는 것에서 머물지 않고, 적을 필요에 따라 만들어내는 것이

9) 김종필, “근대화와 새 세대의 사명”, 세대, 1967.3, 91쪽.
10) 김형욱. 박사월, 『김형욱 회고록 (2)』, 아침, 1995, 288쪽

11) 진실화해위원회, 2009년 보고서.
12) 함평 고구마 사건으로 유명한 서경원의 경우 문제를 제기하자 군청직원, 면직원, 정보과 형사, 관변단체가 총동원되어 이들을 불순세력으로 몰았다고 한다.

야말로 국가의 폭력성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행태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유신 체제 하에서나 87년 이전까지 한국에서 그런 일은 수없이 그냥 관행처럼 반복되었다. 경찰, 중앙정보부(국정원), 보안사 등은 자신들이 심어놓은 정보(망)원의 밀고를 받거나, 또 의심되는 사람을 고문하거나, 또는 약점이 있는 사람을 잡아서 그와 뒷거래를 해서 자신이 원하는 ‘그림’을 그려내는 방법을 사용해 왔다. 즉 약간 ‘냄새가 나는’ 사람의 동창, 친구, 친척, 과거 안면 있는 사람 등 지푸라기라도 하나 있으면 이들을 연결하여 고문을 통해 ‘작품’을 그려내고, 그림이 될 것 같으면 마치 “무슨 중대한 것을 발굴해 낸 것처럼, 진리를 깨달은 것처럼 얼굴에 화색이 도는 낮 빛을 하는”¹³⁾ 공안기관의 ‘빨갱이’ 제조, 간첩 제조, 범죄자 제조는 일제시기와 해방이후부터 한국의 공권력이 자행한 일이었다.

이러한 조작에 의한 간첩 만들기는 일제가 종종 사용했던 방법이었다. 일제 식민지 통치 하에서 훈련을 받은 간부들에 의해 만들어진 한국 경찰과 공안기구는 이승만 정부 시기부터 인위적으로 좌익 혹은 간첩을 조작하여 반대세력을 위축시키는 정치적 목적을 얻기 위한 작업을 하기도 했다. 이승만 정권 하의 국회 프락치 사건, 조봉암 사건 등이 대표적이었다. 그러나 유신체제 이후 87년까지 이와 같은 조작이 가장 만연하였다. 박정희 정권 이후에는 사회주의 활동이 합법적이고 북한과의 내왕의 기회가 있었던 재일동포, 북한에 납치되어 북한으로부터 사상 교양 교육을 받는 적이 있었던 납북어부, 해방 정국이나 4.19 직후 민족주의 사회주의 활동 경력을 가진 인사들, 서독에 유학하여 북한이나 사회주의 사상에 노출될 기회가 있었던 유학생들이나 유럽거주 주민들, 한국전쟁기 부역혐의가 있거나 의용군에 징집된 경력이 있던 사람들이 주로 대상이 되었다.

유신체제 하 최대의 조작 사건은 이른바 ‘인혁당 사건’(인민혁명당 사건)과 ‘민청학련 사건’(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 국가변란기도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이미 사건 직후부터 박정희 정권이 위기를 돌파하고 민주화 운동세력을 위축시키기 위해 관련자들을 고문해서 ‘만들어낸’ 대표적인 조작사건으로 거론되어 왔는데 국정원 진실위원회의 진실규명과 법원의 판결로 최종적으로 그 조작사실이 확인되었다. 1974년 4월 25일 중앙정보부는 민청학련이 조총련, 인혁당과 결탁하여 국가변란을 기도했다고 발표하면서 1,034명을 검거하여 57명을 구속하였고, 인혁당 재건위 관계자 27명을 구속했다고 발표하였다. 박정희 정권은 학생데모를 국가변란을 기도한 반국가단체 사건으로 확대 발표하였다. 1975년 4월 8일, 인혁당 및 민청학련 관련자 8명에게는 사형이 선고되고 8명은 무기징역, 6명은 징역 20년 형이 확정된 후 18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8명을 사형시켰다.

그러나 국정원 진실위의 조사에 의하면 민청학련이라는 조직은 반정부 데모를 위한 투쟁기구에 불과하며 유인물에 언급된 것에 불과하지 실제적인 조직을 갖추고 있지 않았으며, 중

13) 김근태, 『남영동』, 중원문화, 1988, 79쪽

앙정보부에서 조작한 것이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그 성격 역시 역할분담을 통해 동시다발 데모를 하자는 조직이었지, 당시의 정부 발표 ‘폭력으로 정부를 전복하여 공산국가 건설을 기도한 반국가단체’와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하였다. 유신정권 타도를 목표로 한 학생데모는 ‘노동정권 수립을 통한 사회주의 정권 건설’로 조작되었다. 당시 중앙정보부의 상황보고에 의하면 중앙정보부는 이적성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하였으며 대통령 담화 내용과 수사결과가 일치하도록 전형적인 짜맞추기 수사를 진행하였다.¹⁴⁾ 인혁당 재건위 사건 역시 관련자들이 개인적으로 사회주의 사상을 견지했을 수도 있고, 북한방송을 청취한 사람도 있어서 일부가 북한에 대해 우호적인 생각을 가졌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들이 구체적인 결사를 조직하여 반체제 활동을 하거나 민청학련을 배후 조종했다는 증거가 없었다. 강압적인 수단(고문)을 사용해서 조서를 작성한 다음, 거대한 공안사건을 조작하고 관련자들을 전격적으로 처형한 것은 일종의 국가범죄였다.

‘민청학련’, ‘인혁당’ 사건 외에 대표적인 ‘간첩 만들기’는 유럽거점 간첩으로 이름붙인 김규남 사건, 최종길 교수 사건 등이 있다. 그러나 규모로 보면 재일동포, 납북어부 등이 가장 많다. 휴전선 접경지역에서 생계를 위해 고기잡이를 하다가 북한에 피랍되고, 또 가족이 있는 남으로 내려왔던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희생양이었다. 박정희 정권은 어부들이 남한 해상에서 북한경비정에 피랍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귀환하면 수십 일 동안 구타, 고문 등을 가하여 북한해상에서 월선조업을 하였다는 허위자백을 받아내 처벌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당시 중앙정보부는 ‘혐의 없는 자라도 입건하라’는 지시를 경찰에 하달하였고, 검찰은 법원에 사건을 기소하면서 ‘국가 시책에 의한 사건’이라고 기재하여 기소했다. 정보과 형사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진술하지 않으면 뺨을 때리거나 군화발로 걷어차기 예사였고, “다른 사람은 군사분계선을 넘었다고 하는데 너는 왜 부인하느냐”고 다그친 다음, “원하는 답”을 얻어냈으며,¹⁵⁾ 원하는 답이 안 나오면 답이 나올 때까지 고문을 가했다고 한다.

이후 박 정권은 정치적 필요에 의해 납북귀환어부들을 수시로 간첩으로 조작하여 처벌하였다. 당시 중앙정보부 등 공안기관이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첫째, 납북귀환어부는 대부분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거나 겨우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로 자기 방어능력이 없었던 사람들이었다. 둘째, 납북귀환어부는 피랍되어 북한에 머물렀던 기간에 사회주의와 북한체제의 우월성 등을 교육받았고, 북한의 우수한 산업시설과 관광지 등을 견학 하였고, 남한에

14) 그리고 이른바 ‘인혁당’ 관계자인 도예중, 서도원 등이 여정남을 포섭해 전국적인 학생봉기를 배후에서 지원하려했다는 수사발표 역시, 여정남이 서울의 학생운동지도자들과 접촉한 것은 사실이나, ‘민청학련’ 지도부를 조종, 지도할 위치에 있지 않았으며, 학생들이 이들 ‘인혁당’ 관계 인사들과 전혀 접촉사실이 없었으며 조총련과의 연계 역시 없었다는 사실 등을 통해 전형적인 조작 사건임이 드러났다.

15) 태영호 납북사건 신청인 강대광 진술 (진실화해위원회, 2008, http://www.jinsil.go.kr/appdealing/databoard/app_list.asp)

내려가면 북한의 우월성을 지인들에게 홍보하라는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다. 따라서 남북 어부는 조금만 가공하면 ‘간첩’으로 만들 수 있는 ‘반제품’이나 마찬가지로 그들은 정권에게는 ‘황금어장’이었다.¹⁶⁾

박정권의 반공법은 오직 반정부세력이나 국민들에게만 적용되고 자신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결국 두 개의 국가뿐만 아니라 두 개의 국민이 존재했다.

2) 준전시 상황규정과 항구적 비상사태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직후 박정희는 “사상관계범을 급히 처형하라”는 지시를 내렸다.¹⁷⁾ 7.4 공동성명 직전에 박정권은 간첩사건 관련자 10여명을 급히 처형했다. 실제 당시 교도관들은 박정희가 ‘우리나라에는 사상범 하나도 없게 만들어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¹⁸⁾ 김선명은 담당 교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전향시키라고 했습니다. 북에서 자꾸 송환을 요구하니 귀찮다고 죽여도 좋으니 한명도 남김없이 전향시키라구요”라고 말했다고 증언 한다. 특히 한옥신은 외국에는 예방구금이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그러한 제도도 없다고 우려하였다. 결국 당시 체제의 핵심부인 대통령, 중정,公安검찰 등이 비전향수의 처리 문제에 대해 거의 일치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75년 4월 30일, 월남 붕괴는 박정희 정권 위기감에 기름을 부은 사건이었다.

결국 1973년에 본격화된 폭력적인 전향공작과 1975년 사회안전법 제정은 1975년 4월 9일 인혁당 관련자 8명에 대한 즉각 처형과 더불어 박정희 정권의 두려움이 극단적으로 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것은 일제하의 치안유지법 체제 하에서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1938)을 제정하여 조선인 사상범을 “선도하여 대거 전향시키고 사회복귀를 확보”하려 했던 조치와 더불어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1941)을 공포하여 출옥한 사상범을 보호관찰 하에 두려 했던 조치와 같은 것이었다. 결국 일제 말 치안유지법 상의 예방구금 제도, 1950년 개정된 국가보안법 제12조의 ‘보도구금’ 조항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회안전법이 제정되어 좌익수들은 전향을 하지 않고서는 감옥을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유신체제는 ‘총력안보’의 구호 아래 일제 말기의 ‘국방국가’, 전시파시즘 통치방식을 답습했다. 중일전쟁 후 일본에게 안보는 주로 실제 전쟁과 결부되어 있었으나, 박정희 정권에게 안보는 북한의 위협과 내부의 반정부, 반체제 세력의 위협이었고, 어쩌면 1971년 대선 이후

야당 후보 김대중, 사법부 내의 반대세력, 그리고 학생 및 재야 운동세력 등 내부의 적은 북한보다 더 두려운 존재였을 수도 있다. 안보는 대북용이 아니라 국내용이다. 안보는 국민을 빨갱이로 몰아 잡아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신헌법 전문에는 처음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포함되었다. 그런데 그것은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서독에서 동독과 내통한 공산당 불법화한 논리로서 방어적 민주주의, 즉 자유주의 체제를 부정한 집단에게는 자유나 민주주의를 누리게 할 수 없다는 논리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²⁰⁾ 국순옥이 지적한 것처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자유주의적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로운 민주주의, 즉 박정희의 군사독재를 정당화한 반공주의, 국가가 종교화된 상황을 달리 표현한 것이다.²¹⁾ 이것은 공산주의라는 적에 사상전으로 맞서는 민주주의, 즉 실제로는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자유권적 기본권을 부정하는 반자유주의적인 내용을 갖는다. 독일의 방어적 민주주의는 히틀러의 나치 체제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자는 ‘방어’의 측면도 있었으나 박정희의 유신체제는 오직 공산주의 ‘방어’논리로 일관했다. 유신체제의 심각한 언론탄압과 여러 간첩사건 조작, 파시즘적 지배체제가 그것을 보여준다.

유신헌법 제53호의 대통령 긴급조치 선포 관련 조항과 이후 긴급조치 1.2 호와 9는 대통령의 명령이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한 대표적인 조항이었다. 이러한 논리가 법제화된 것이 노동자들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제약하기 위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1971)과 유신 이후 발표된 긴급조치였다. 긴급조치는 74년 1월 8일 제1호가 선포된 이래 79년 12월 8일 ‘긴급조치 9호’가 해제될 때까지 유신시절을 상징하는 통제체제였다. 72년 12월 27일 비상계엄 하에서 국민투표로 가결된 유신헌법은 제53조에 대통령 긴급조치권을 규정하였는데, 천재지변이나 전시 상황에서 대통령에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률에 따라 권력행사를 가능하게 한다는 취지에 바탕을 두고 있으나 실제로 유신 하의 긴급조치는 사후적 비상조치 뿐 아니라 사전적 예방적 조치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고,²²⁾ 비상조치권의 내용 범위가 지극히 광범위하며 국회의 집회나 소집에 관계없이 발동될 수 있으며 국회나 법원의 통제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치 대통령을 전제 군주와 같은 지위로 격상시키는 초헌법적인 힘을 갖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효율성’이라는 논리에 기초해 있었다.

16) “간첩조작사건 왜 어부가 단골 대상이었을까”, 오마이뉴스, 2011. 1.19.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511138&PAGE_CD)

17) 김형욱.박사월, 앞의 책, 127-128쪽

18) 비전향 장기수 안학섭, 이일재 증언(MBC, 2001)

19) 후지타 쇼조, 최종길 옮김, 『전향의 사상사적 연구』, 논형, 2007

20) 1950년대 독일에서는 한국의 국가보안법과 같은 것이 없었으며,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점이 있어도 그것은 나치체제와 같은 전체주의 부활에 대한 경고가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냉전반공주의의 일변도였던 한국과는 분명한 차별성을 갖고 있었다.

21) 국순옥,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무엇인가』, 『민주법학』, 제8호, 125-165쪽 1994; 국순옥, 『헌법학의 입장에서 본 자유민주주의의 두 얼굴』, 『민주법학』, 제12호, 69-89쪽, 1997

22) 긴급조치 1호는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제안 또는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라고 되어 있다.

1972년 제정된 유신헌법의 부칙에 “이 헌법의 제정과정에 대해 제소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이 유신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10월 유신이나 이후의 긴급조치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노골적 폭력 체제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유신헌법은 국민주권, 권력분립, 기본권 존중 등 민주주의 원칙을 위배한 법이었다. 대통령은 국회를 언제나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으며,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의 성격을 상실, 법관 임명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은 완전히 무시되었다. 중앙정보부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위에 군림하는 최고의 권력기관이었으며, 야당과 재야 정치적 반대자들은 물론 여당 인사들에 대해서도 고문과 테러가 만연했다.²³⁾ 시, 군, 읍, 면, 동 이장을 주민 동원과 주민 감시하는 요원으로 만들었으며, 학원을 병영화하고 대학의 교수를 비롯한 행정직원을 학생을 사찰하는 요원의 역할도 하게 만들었다. 지역에서는 관변조직이, 학교에서는 학도호국단 등 관제 학생조직이 움직였다. 기업에서는 노조 활동 자체가 사실상 불법화되었고, 공장 새마을 운동은 철저하게 위로부터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다. 유신체제는 1971년까지 어느 정도 유지되어 오던 절차적 민주주의, 정당정치에 종지부를 찍었다.

3) 국가지상주의와 능률적 민주주의

10월 유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박정권은 ‘생산적인 정치’를 강조하였다. 그것은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민적 합의의 조성, 부질없는 상쟁과 분열의 억제, 정치의 안정, 조용하고 깨끗한 직접, 혹은 간접 선거, 국가 문제에 대한 국회의 격의없는 협조를 강조하였다.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여론을 정책에 반영하는 정치적 차원의 역할 뿐 아니라 국가목표를 국민에게 이해시키고 여론을 주도함으로써 국민의 동의를 기반을 넓히는 일에 아울러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²⁴⁾ 이것은 바로 국가의 지상 목표 즉 ‘총력’ 안보와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정치적 갈등’ ‘시민사회 내의 갈등’이 억제되어야 하며, 정당과 시민사회는 바로 국가 목표 수행을 위한 전달 벨트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파시즘의 논리인 것이다. 생산적이라는 것은 일사분란한 동원과 갈등의 억제를 의미하였다.

박정희는 정당정치를 비생산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통치와 정치를 분리하고 통치는 대통령 자신만이 담당하는 영역으로 격상시키고 있다. 박정희는 긴급조치 1.2호 선포에 즈음하여 “헌정의 기본과 국가의 안전보장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비능률과 낭비를 제거하면서 국력배양을 하기 위해 “ 긴급조치를 선포하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능률적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입법부나 사법부도 거추장스러운 것이 된다.

23) 여당 인사들에 대한 탄압으로는 공화당 내의 항명파동이 대표적이다. 1971년 오치성 장관 해임안 통과과정에서의 4인체제의 항명에 대해 당사자들을 가혹하게 고문하였다. 이 항명파동으로 인해 여당 내에서 찬반 토론은 일체 사라졌다.

24) 박정희, 민족중흥의 길, 광명출판사, 1978, 58-61쪽.

대법원의 경우 유신헌법 하에서 대법원 판사들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였으며 그동안 대법원장이 갖고 있던 법관 임면권을 대통령에게 이전하였다. 또한 헌법위원회를 설치하여 대법원이 갖고 있던 위헌법률심사권뿐만 아니라 탄핵결정권, 위헌정당 해산권을 부여했고 대통령이 헌법위원회의 9인 중 3인을 선임하는 동시에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을 임명하게 하였다. 이런 방식으로 사법부는 대통령에게 완전히 종속되었다. 대통령의 의중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은 재임용에서 탈락시켰고, 탈락시킨 후에는 변호사 개업도 어렵게 만듦으로써 정권 반대 판결의 가능성은 차단하였다. 그리고 박정희 정권은 서울 형사지법원장과 수석부장판사를 통해 시국 사건의 판결을 ‘조정’하였다. 사실상 모든 시국사건 판결에 중앙정보부가 개입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박정희 정권은 국민들을 가장 말단 행정조직인 반 단위로 조직한 다음 매월 말일을 반상회의 날로 정해서 전국적으로 일제히 반상회가 열리도록 하였다. 이것은 일제 말의 국민반, 애국반 등의 조직이 거의 그대로 부활한 것이었다. 당시 농촌에는 수많은 단체가 조직되어 있었었는데, 이 모든 것은 행정기관의 직접 통제를 받았으며 단체의 장은 말단 행정기관의 끄나풀이었다. 노금노는 1973년 봄 자신이 맡고 있었던 직책을 열거하였는데, 마을금고 회계, 50여 호를 대표하는 수반장, 새마을 사업 추진위원, 새마을 지도자, 마을 협동 회장 등이었으며 그 외에도 농협 총대, 엽연초 조합 총대, 농지위원, 지도소 자원 지도자, 4H 독농가, 시범농가, 산림계장, 이장, 민방위 대장, 예비군 소대장, 절미저축부인회, 명예반장, 명예파출소장, 정당의 책임자, 반공연맹 책임자 등의 직책들이 있었다고 한다. 이들은 걸핏하면 무슨 교육이다 동원해가지고 높은 양반들 일장 훈시 하는데 댕가지 숫자 채워주는 것이 고작이고, 새마을 회관에 가서는 ‘때려잡자 김일성’, ‘처부수자 공산당’을 외치고, 새마을 사업 역시 마을민의 자발적 필요와는 무관하게 협조하지 않으면 찍히는 마을이 되기 때문에 ‘국가지상주의’에 충실히 따를 수밖에 없었다.

유신체제의 경우 그 기본 성격이 일제 말기 전시동원체제를 그대로 모방, 연장한 것이었는데, 모든 것은 국가, 민족, 국민의 이름으로 시행되었고, 정치사회 문제에 관하여 개인이 독자적으로 사고하고 의사를 표현할 여지는 거의 없었다. 일제 시기의 천황이라는 상징대신에 대통령이 법 위에 있었고, 명령이 법을 대신하였으며, 공권력의 노골적인 폭력이 법의 이름으로 행사되었다. 전쟁위기를 빌미로 국민들에 대한 사상적 통일성 강요, ‘국민운동’의 이름을 빌린, 위로부터의 동원, 말단까지 연결된 주민 세포조직을 통한 주민 상호감시, 상명하복의 철저한 관료체제, 공격적인 업적주의와 극단적인 위계질서, 학교의 군사교련과 병영화, 도덕주의, 즉 근검, 절약, 청결, 위생, 질서와 같은 가족중심, 개인적 가치의 강조 등의 특징을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

박정희의 국가지상주의는 사실 박정희 군부세력의 ‘사적 이해’를 전도한 것이었다. 박정희

의 국가 강박증은 사실상 지켜야 할 민족과 국가의 정신과 내용이 결여된 사실, 즉 국가다움의 내용을 결여를 거꾸로 표현한 것이다. 박정희는 천황의 직속부대인 일본군에 들어가 천황에 충성을 맹세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남로당 당원이었다. 그는 한국의 ‘국민국가’를 부인하는 최전선에 섰던 부인할 수 없는 이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민족, 국가를 위해 몸을 던진 적이 없고, 오직 시세에 편승한 경력을 가진 인물이었다. 결국 그에게 국가는 자신의 지위와 권력만 보장해준다면 그것이 일본 천황제 국가이건 독립된 남북한 국가이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실제 국가나 민족에 대한 충성이 설득이 아닌 폭력의 방법으로 요구될 때, 실제로 국가나 민족은 텅 빈 것이 된다. 마루야마 마사오가 주장하였듯이 천황제의 초국가는 ‘텅빈 국가’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이 강조하는 애국주의는 대체로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하위에 위치한다. 그러나 박정희의 국가주의는 보편적 가치의 인도를 받지 않는다. 수량적 성장 지표, 후진국 콤플렉스, 북한과의 체제경쟁, 강박증 등이 그 국가주의의 실제 내용이다. 박정희 개인의 이력이 그것을 웅변적으로 뒷받침해 준다.

4) 국가의 거짓말과 언어의 타락

“더 이상 인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은 존재하기를 그쳤다. 물질과 허세만이 왔다갔다 한다. 보이지 않는 공포와 강력한 경멸의 뒤범벅을 우리는 오늘의 삶이라고 부른다. 게다가 그 공포와 그 경멸을 더 많이 차지하겠다고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싸우고 있다. 하나. 그러니 그 삶이라는 것에 손이 닿자 말자 손은 썩기 시작하고, 그 삶이라는 것에 발을 들이말자 말자 발을 썩어 버린다. 그 문드러진 팔다리로 나는 힘치게 덜어간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거짓말과 타협의 타협을 우리는 오늘의 삶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더 많은 거짓을 차지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경쟁적으로 싸우고 있다. 술보다 더 지독한 마약이 필요하다.”²⁵⁾

유신체제는 동의보다는 폭력에 의거하여 유지되었을 뿐 아니라 위기를 과장했거나 거짓으로 조작하였다. 우선 유신체제를 정당화한 국가안보위기론은 과장되었거나 정권의 위기를 달리 표현한 것이다. 1967,8년도에 북한의 대남 도발이 격화되기는 했지만 1969년 이후에는 현저히 줄어들었으며 유신 직전인 1970,71년 들어선 이후에는 오히려 적대행위가 감소하였다. 북한은 일본 유럽 국가 등 서방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미국과의 접근도 모색하였다. 게다가 71년들어 북한은 군사비를 삭감할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1971년 직후 닉슨 독트린과 데탕트가 남북한의 적대를 완화시킬 수 있는 국제적인 조건을 조성하였을 지언정 안보위기를 가중시켰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다.²⁶⁾ 그래서 1972년

25) 정현중, “노우트 1975”

시점에서 ‘안보위기’가 있었다고 해도 이는 객관적이라기보다는 박정권 자신이 규정한 매우 주관적인 것이었다. 객관적 위기가 있었다면 그것은 북한의 가시적 도발이나 위협에 의한 것이었다기 보다는 미군철수로 인해 미국의 전폭 지원과 북한의 위협을 명분으로 정치적 지배를 유지해온 남한 지배세력의 위기였다. 따라서 자신의 위기를 국가의 위기라고 말한 것은 과장 혹은 조작된 것이었다.²⁷⁾

박정권은 10월 유신을 선포하면서 통일이라는 거역할 수 없는 민족적 과제를 겹으로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파시즘적 정치체제의 수립의 명분으로 삼았다.²⁸⁾ 특히 박정희는 유신헌법 찬단 투표를 앞두고도 국민에 대해 협박성 발언을 했는데, “만일 국민 여러분이 헌법 개정안에 찬성하지 않는다면 나는 이것을 남북대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국민의 의사표시로 받아들이고 조국 통일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것을 아울러 밝혀두는 바입니다”라고 하면서 개헌안이 통과된다면 마치 북진통일을 하거나 계엄보다 더 비상조치를 하겠다는 식의 위협을 가하였다.²⁹⁾ 박정희 자신이 10.17 비상조치의 배경으로 강조하고 있는 남북대화의 적극적 전개 필요성도 사실상 ‘거짓’이었다.

그는 유신체제가 7.4 남북 공동성명에 기초한 평화통일의 필요성 때문에 성립되었고 그것을 지향한다고 했지만, 박정권을 진정으로 평화통일을 추구한 적이 없었다. 국민들에게 위협을 가한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실제로는 통일에 대해 아무런 진정성도 구체적인 방안이나 정책도 갖지 않는 상태에서, 개헌안 통과를 통일과 연관시키는 것 자체가 국민 기만이었다. 박 정권은 민간 차원의 통일운동을 이적시하였다. 그리고 북한에 내왕하여 간첩 혐의를 받던 사람들을 서둘러 처형하기도 했다.³⁰⁾ 이 역시 겹으로 표방한 남북 공동성명의 정신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행동들이었으며, 남북 교류, 통일은 오직 통치자가 관여할 사안이며, 국내 정치 혹은 국민 일반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행동들이었다.

물밑에서는 북한 최고 권력자들과 비밀 교섭을 하고 남북 공동선언을 서두르면서도 남한 국민들에게는 북한의 위협을 들먹인 것은 국민 기만이었다. 김형욱은 북한과의 비밀접촉이 독재체제 강화를 위한 계략이지 분단된 민족을 통합하는 민족사적 대경륜의 서막이 아니었다는 것을 단번에 간파하였다고 기록하였다.³¹⁾ 정치적 목적 때문에 박정희와 이후락 등 권

26) 단지 미국의 주한미군 감축 계획은 박정희와 한국의 지배세력에게는 심각한 안보위기로 감지될 수는 있었다. 물론 이러한 주한미군 감축움직임은 지배세력의 위기의식에서 출발하여 국민적 위기의식으로 전화되었다. 이러한 국민 의식상의 안보위기도 비록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하더라도 하나의 여론 혹은 정치적 분위기라는 형태로 객관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그것이 곧 유신을 정당화해주는 것은 물론 아니었다. 홍석률, “유신체제의 형성”,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회, 『유신과 반유신』, 선인, 2005, 68쪽

27) 74년 11월의 제 1땅굴 발견, 월남의 패망이 위기의식을 가중시켰을 수 있으나 유신이 선포되던 72년 시점에 그러한 도발은 없었다. 오히려 남북 비밀 회담이 진행 중이었다.

28) 홍석률, 앞의 글, 92쪽.

29) 홍석률, 앞의 글, 100쪽.

30) 박정희는 이른바 유럽거침 간첩사건으로 사형 언도를 받았던 김규남, 박노수를 7.4 공동성명 직후인 7월 13일, 28일 전격적으로 처형하였고 임자도 간첩사건 정태홍 등 30여명도 곧바로 처형하였다.

력실세가 남북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하며 이를 급진전시키는 방향으로 갔다.³²⁾

박정희의 ‘통일’ 명분이 허구인 것은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조직 명칭에서도 드러난다. ‘통일’ 주체 국민회의는 실재는 ‘통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이것은 유신이 통일을 대비한다는 것이 거짓임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인데, 설립된 후 8년 동안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단 한 건의 의미 있는 통일정책도 수립된 적도 없고 통일논의도 이루어진 적이 없기 때문이다.³³⁾ 그저 두 차례 단일후보로 추천된 박정희 부호를 대통령으로 선출한 것이 그들의 모든 역할이었다. 통일주체국민회의는 정해진 대통령을 뽑는 형식적인 선거인단에 불과했다. 이러한 들러리 조직, 통일과 무관한 조직을 만들어 마치 그것이 국민적 대표기구인 것처럼 선전한 것도 기만적인 것이었고, 국민들이 그 속을 훤히 볼 수 있는 행동이었다.

당시 계엄 찬반투표를 비롯한 모든 선거도 청와대의 기획과 공안기관의 철저한 감시와 위협 속에서 진행되었으면서도 마치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인 것처럼 포장한 것도 사실상 기만적인 것이었다. 유신헌법상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고 명시한 것 역시 기만적인 것이다. 유신체제 하의 대통령의 권한은 민주와도 공화와도 거리가 먼 거의 종신 총통제에 가까운 것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긴급조치’ 선포 이유도 거짓이었다. “천재, 지변,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 국가의 안전보장, 공공의 안녕질서의 위협 등 내정 외교 등 국내외 정세의 위기에 대처한다”는 긴급조치는, 실제 긴급조치 위반 사건의 통계를 통해 보면 오직 재정조치 한건을 제외하면 모두가 “공공의 안녕질서” 즉 국내 반정부 저항운동을 막기 위한 것임이 드러났다. 앞에 열거한 모든 위기는 사실상 내부 반대세력의 도전이라는 한 가지를 말하기 위해 그냥 덧붙인 것에 불과한 것이었다.³⁴⁾ 결국 ‘국가비상사태’, ‘유신헌법제정’, 긴급조치의 명분으로 내건 통일의 필요라는 것은 완전히 거짓 명분에 불과했다.

인혁당 재건위 관계를 전격 처형한 것은 ‘법 아닌 법’(긴급조치)에 의한 것이었지만, 실제 가장 심각하게 헌법이나 실정법을 위반한 것은 박정권 자신이었다. 1972년 남북 정상회담의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았고, 7.4 남북공동성명도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는 문서였다.³⁵⁾ 왜냐하면 이후락의 방북은 반공법, 국가보안법 위반이었으며, 따라서 남북공동성명 역시 공식 문서가 볼 수 없었다. 북한과는 공식 외교관계가 없었기 때문이다. 반공주의와 공산주

의를 포기하지 않았던 두 국가가 ‘민족대단결’을 추구한다는 것도 사실상 기존 한국의 실정법, 국가 공식입장과 배치된 것이었다. 물론 박정권은 통치행위라는 명분으로 이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논리는 법의 지배라는 원칙이 통치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전제군주시절의 논리를 정당화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기존의 반공주의는 사실상 허구였다는 것을 실토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유신이후 박정권이 그렇게 강조한 ‘국가’역시 메이지 헌법의 고쿠타이(國體)를 연상시키는 군국주의 냄새가 많이 나는 개념이지만, 그것의 진정성 역시 의심스럽다. 박정희는 “국민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와 국가를 하나로 알고 국력배양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1972.12.27 제8대 대통령 취임사) “국가없는 민족의 번영과 발전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1975.1.12 연두기자회견) “무엇보다도 국민총화를 굳게 다져가야”(1975.2.13) “국가가 있어야 학교가 있고 학문이 있다”(1977.1.12 연두교서). “국가의 생존이 개인의 자유에 우선한다” 이것은 “국가에 의해 모든 것을, 국가에 반역하는 것은 아무것도, 국가 밖에는 아무 것도”를 워친 뭇솔리니의 외침을 연상케 한다.³⁶⁾ 그런데 이 국가주의의 논리는 같은 시기 7.4 공동성명에서 나온 ‘민족대단결’의 논리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분단 하 한국이 민족대단결을 추구하려면 국가주의를 완화하거나 해체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만약 7.4 공동성명의 ‘민족대단결’이 북한의 요구를 양보하여 그것을 그냥 받아들인 것이라면, 거꾸로 북한의 주장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정도로 남한 정부는 자신의 국가철학이 없었다는 말이 된다. 어떤 경우든지 여기서 말하는 국가지상주의는 기만적인 것이었다.

3. 1987년 6월 항쟁과 민주화의 성과와 한계

1) 국민의 기본권 회복

1973년 12월 31일 민주수호 국민협의회 주최의 시국간담회에서 대통령에서 제출한 건의문을 보면 “국민의 기본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삼권분립 체제를 재확립할 것, 공명선거에 의한 평화적 정권 교체의 길을 열것”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1974년 과거 야당 인사까지 참가한 민주회복국민회의의 ‘국민선언’을 보면, 박정권이 역사적 현실이라는 변명 하에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를 무시한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민주적 과정을 통한 국민적 합의’, ‘민주체제의 재건.확립을 통한 국제적 고립의 탈피’, ‘민주체제 확립을 통한 공산체제의 위협 방어’를 강조하고 있다.³⁷⁾

31) 김형욱, 박사월, 앞의 책, 115쪽.

32) 홍석률, 앞의 글, 92쪽.

33) 송병헌, “유신지배체제와 반유신운동”, 『기억과 전망』, 2005년 겨울, 85쪽.

34) 국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조치는 오직 3호 하나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가 반정부세력 탄압을 위한 목적으로 발동되었다. 실제로 긴급조치 위반자의 95 퍼센트는 모두가 반정부 활동 혐의였다. 전체 판결건수 589건 중에서 국내재산 해외도피 공무원 범죄 동조 등은 29건 5%에 불과했다.

35) 최상천, 『알몸 박정희』, 인물과 사상사, 2007, 271 쪽.

36) 양성철, 『분단의 정치 : 박정희와 김일성의 비교연구』, 한울, 1987, 260쪽.

37) NCC인권위원회, 70년대 한국민주화운동과 기독교, 1권, 438-440쪽.

야당인사와 재야지식인들의 반대의 논리는 이처럼 반공국가의 정당성은 인정하면서 정권의 비민주성을 비판하고, 반공의 실질적 토대 구축과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보다 ‘본질적이고 원칙적인’ 자유민주주의적인 질서의 회복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과 전자의 ‘국가주의적 자유주의’와의 차이는 전자가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반공질서를 구축하는 것은 선이며 그것이 자유민주주의라고 본 것이라면 후자의 경우는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반공질서가 강화될 수 있다는 논리인 셈이다. 따라서 남한의 분단국가와 반공주의의 정당성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는 양자 간에 차이가 없으며, 야당을 대안으로 생각하는 정권교체가 가능한 현실타개의 방법임을 주장한다.

유신헌법의 제정과 반대를 둘러싼 논쟁 과정에서 그것을 지지한 세력이나 그것을 반대한 세력이나 모두 ‘자유민주주의’라는 담화구조를 사용하였다. 즉 자유민주주의란 지배이데올로기, 혹은 대항이데올로기라기 보다는 일종의 공준이었고 거역할 수 없는 공통의 이념적 자원이었던 셈이다.³⁸⁾ 자유민주주의의 이념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해석’만이 주요한 쟁점이었다면, ‘자유민주주의’라는 담화 속에서 대립한 세력들 중에서 어떤 세력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세력인가를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할 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이들은 모두 자유민주주의라는 간판 만을 이용하였지, 실제 그것이 갖는 의미, 그것의 정책화, 사회적 실현의 문제에는 거의 무관심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전두환의 5공화국에는 유신체제의 연장이다. 단지 일제말 파시즘적 논리인 국민총화의 논리보다는 자유화와 개방의 언술을 추가했다. 그러나 통치의 방법에서는 유신과 마찬가지로 명령과 폭력으로, 그것을 정당화한 이데올로기로는 반공주의와 성장주의를 그대로 유지했다.

6월항쟁은 73년 이후의 반유신 운동, 1981년 이후 5공 거부 운동의 결과였다. 그것은 자유민주주의의 틀 내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자는 운동이기도 했다. 한국의 군부-공안 지배력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킨 계기가 되었고, 국민의 기본권, 삼권분립,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 가능성을 열었다. 그것은 박정희 사망으로 유신체제 청산의 길이 열렸으나 광주 5.18이라는 더 폭압적인 군사세력의 자기방어로 귀결된 것을 7년 이후에 실현한 것이다.

6월 항쟁으로 유신과 5공 체제가 부인하였던 노조활동의 자유, 언론의 자유, 사법부의 독립을 허용한 것이 가장 중요한 성과였다. 그리고 유신 이전의 박정희 군부 쿠데타 세력이 강화했던 국가보안법-반공법 체제, 통일운동에 대한 원천적인 금압 상황을 돌파할 계기를 열었다는 점에서 87년 6월 항쟁은 유신 철폐를 넘어서서 반공 개발주의 체제를 넘어서고 분단체제를 흔드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38) 김지하는 양심선언에서 “나는 공산주의자이기는 커녕, 공산주의가 무엇인지, 공산주의 국가에서의 생활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한 사람인 것이다.”라고 하면서 한국의 조건 속에서 자생적 공산주의자가 생겨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상우, 비록 박정희 시대 3, 중원문화, 1985, 108쪽.

2) 대통령 직선제의 복원

유신헌법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정치체제는 여전히 자유민주주의적인 정치체제에 입각하고 있었다. 유신헌법에 있어서도 국가의 성격은 민주공화국임이 명시되어 있으며 민주정치의 기본인 국민주권의 원리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또한 자유민주주의의 실천적인 징표인 국민의 기본권이 충실히 보장되어 있으며 다원적 정당제와 의회주의 그리고 사법권의 독립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³⁹⁾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의 핵심인 대통령과 의원의 직접 선출권이 제한되어 있었다.

유신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삼권분립의 원칙과 정당을 통한 경쟁의 원리가 견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완전 부정한 것이라기보다는 그것을 심각하게 변형 굴절한 것이라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자유민주주의 개념규정은 곧 선거제도, 정당제도의 존재, 삼권의 분립이라는 정치적 형식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것은 곧 공산주의 정치제도와 민주주의 철차를 완전히 폐기시킨 파시즘적 정치체제와 구별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한국에서는 곧 반공산주의와 동일시 되고 있다. 그래서 유신헌법 상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공산주의로 부터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방어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승만 정권 하에서 자유를 부르짖은 지식인들이 유신헌법을 지지하고 유신체제에 협력한 것은 사실상 논리적인 일관성을 갖는 것이다. 유신체제의 수립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법학자 한태연은 일찌기 이승만 정권 하의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지지하면서 “국가보안법은 공산주의의 파괴에 대항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자는 법률이지 결코 자유민주주의의 그 자체를 탄압하자는 법률이 아니다”⁴⁰⁾라고 말한 바 있다. 이러한 개념 속의 자유민주주의란 서구에서 논의되는 ‘자유민주주의’의 제반 내용, 예를들면 재산권과 독점의 일정한 제한, 노동조합의 허용, 시장능력이 결여된 존재에 대한 국가적 보호 등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⁴¹⁾라고 밝힌 바 있다.

즉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권 보장이라는 두 권리가 충돌할 경우 유신과 5공화국은 후자에 방법을 두었으나, 민주화 운동과 6월 항쟁은 전자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대통령 직선은 사실 유신 이전의 대통령 직선제 상태로 회귀하는 점은 있으나, 유신으로 이른 5.16 쿠데타 체제의 청산에 미치지 못했다.

39) 갈봉근, 유신헌법해설, 광명출판사, 1975, 7쪽.

40) 한태연, “한국에 있어서의 자유”, 사상계, 1958, 12월호.

41) 월간 다리, 1971.1월호.

3) 87년 체제의 한계 - 유신, 5공 체제 혹은 그 이전의 부정적 유산을 청산하지 못한 점

(1) 정치제도 개혁

1987년 민주화 이후 국면에서 대통령 간선제를 직선제로 전환하는 헌법의 개정 외에 한국의 정치제도에 대한 논의, 특히 대통령제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는 생략되었다. 그래서 특정의 제도나 경쟁의 규칙이 시민의 이익을 어떻게 잘 반영할 것인지, 민주주의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려는 자리잡지 못했다.⁴²⁾ 특히 대통령 5년 단임제와 더불어 집중화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혁 문제는 거의 거론되지 못했다.⁴³⁾

국정감사 제도는 부활하였으나 이중 국가의 핵심인 안기부 등 공안기관에 대한 감사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예산 편성의 권한을 정부가 독점하였기 때문에 증액은 물론 비목의 증설 등은 정부의 동의를 얻게 하여 국회의 권한은 제한되었다. 감사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감사원이 국회 소속이 되지 못함으로써 그 독립성은 보장되지 못했다.

중앙집권주의 완화, 지자체장 선거는 1991년, 1995년 부활되었으나 중앙정부의 예산 인사와 등에서의 권한이 강력하게 남았기 때문에 형식에만 그쳤고, 분권은 형식으로라도 시도되었으나 자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민주화를 ‘선거’ 혹은 권력 교체가능성이라는 개념으로 왜소화시킨 이후 일어난 일들을 보면 선거과정에서의 대규모 불법 정치자금 수수, 90년 3당 합당과 같은 위임된 권력 집단의 폭력에 가까운 합종연횡, 선거라는 절차를 통해서 과거 반민주, 반인권의 전력을 가진 구시대 인사들의 대거 정치권 진출, 지역주의에 의해 굴절된 대중들의 왜곡된 의사표현, 선출된 정치가들의 야합, 부패, 불성실한 국회활동 등 반민주적인 행태는 계속되었다.

(2) 대통령의 권한 제한

87년 헌법은 유신이전의 헌법으로 되돌리지 못한 것 중의 하나가 대통령의 사법부 통제권이 다. 유신헌법 이전에는 법원, 혹은 선거인단이 대법원장을 선출했으나 유신헌법에서는 대통령이 임명하였고, 87년 헌법에서도 이 조항은 개정되지 않았다.⁴⁴⁾

이 밖에 대통령이 수반인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상의 조항이나 대통령

42) 최장집, 『민주화이후의 민주주의 - 한국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기』, 후마니타스, 2005, 171쪽

43) 같은 책, 187쪽.

44) “유신독재 이전에는 법원이 대법원장 뽑았다”, <한겨레>, 2018.5.12.

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을 국회가 재의결하기 위한 의결정족수를 지나치게 높여 사실상 국회의 입법권을 제한한 조항이나 국무위원이나 각부장관 등 주요 고위 공무원의 임명에 대해 국회가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한 것 역시 대통령의 권한을 계속 유지한 조항 등이다. 유신헌법에서 대통령에게 초헌법적인 지위를 부여한 ‘국헌수호자’로서 지위와 같은 규정은 전혀 제거되지 않은 채 지금까지 남게 되었다. 그래서 대통령이 다른 국가기관 상위에 존재하는 듯한 착시 현상을 야기하였다.⁴⁵⁾

유신헌법 및 그 이전부터 존재해온 국민이라는 개념 하에 개인을 국가안보와 전쟁수행을 위한 도구로 파악하는 헌법상의 조항 역시 검토없이 그대로 남았다. 그래서 시민, 인민, 사람 등의 개념이 헌법에 집어넣자는 것은 혹은 학자들의 논의로만 남았다.

대법원장에 대한 실질적 임명권	
이승만 정부 (1948~60)	법관회의
장면 정부 (1960~61)	선거인단(법관 자격자)
박정희 정부 (1961~71)	법관추천회의
유신 이후 (1972~현재)	대통령
문재인 정부 개헌안	대통령

3공화국 헌법	
제99조 ①	대법원장인 법관은 법관추천회의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대통령은 법관추천회의의 제청이 있으면 국회에 동의를 요청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으면 임명하여야 한다.

유신헌법	
제103조 ①	대법원장인 법관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1987년 헌법	
제104조 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45) 한상희, “87년 헌법의 의의와 한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6.10 민주항쟁 35주년 기념 학술토론회, 한국 민주주의 전환의 기로에 서다」, 2022.6.8.

4) 이중국가 체제, 비선출권력의 지배의 지속

유신체제나 5공화국 체제의 기동은 국가 위의 국가, 즉 중앙정보부(안기부)와 보안사였다. 그러나 민주화는 이 두 초법적 국가기관을 폐지하거나 그 권한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키지 못했다. 그래서 민주화 이후에도 여전히 이들 두 기관에 의한 정치개입, 고문, 불법 사찰, 간첩조작, 사상통제는 계속되었다. 그리고 이들 두 초국가기관의 활동에 보조적인 역할을 했던 검찰 등 비선출권력이 이제 민주화에 편승하여 가장 핵심적인 권력기관으로 부상했고, 급기야 이 비선출권력인 검찰 수장이 대통령이 되었다. 6월 항쟁의 최고의 역설이다.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의 시민적 통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관이나 사법부의 자체 권력 강화를 의미했다. 헌법 재판소의 설치, 반민주적인 하위 법률의 폐지나 개정을 요구하는 입헌주의, 법치주의의 강화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지만, 기득권 지배블럭의 지배를 합법화 정당화하는 점도 컸다.

4. 맺음말

유신체제의 전쟁 정치, 그리고 ‘적 만들기’ 작업은 미 중간의 국교정상화와 동서 데탕트라는 예외적인 국제정치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지만, 2001년 9.11 이후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 선포한 것이나 이슬람에 대한 악마화 작업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자본주의 체제는 단지 경제 질서에 대한 정당화만으로 유지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점에서 유신체제의 간첩 조작과 색출, 즉, ‘적과 우리’의 경계 짓기 작업은 예외 상황에만 나타나는 특수현상은 아니며, 따라서 지배질서 일반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처럼 정치체의 ‘일탈자’를 적으로 간주하면서 통제를 하는 통치 방식은 87년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간의 적대관계가 지속되는 지금까지 완화된 형태로 지속되고 있다. 조용환 변호사의 대법원 판사 선임을 위한 청문회에서 한나라당은 천안함 사건에 대해 ‘확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의 사상을 문제 삼았고, 결국 대법관 임용을 거부하였다. 즉 개인의 사상을 법적 규제의 대상으로 삼는 사상통제는 일제 총독부 지배체제의 유산이며, 유신체제에서 극성을 부렸다가 현재까지 남아있다. 이것은 국가가 인간의 내면성에 대한 통제의 권리를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유신체제의 핵심적 내용인 국민 통제, 국민의 사상 통제는 그대로 남았다.

6.29 선언으로 6월 항쟁이 일단락되었다는 것은 유신독재, 5공 청산의 가장 결정적인 한계

로 남았다. 정치변혁의 헤게모니는 제도 정치권으로 넘어갔고, 항쟁 세력은 자신의 모든 투쟁의 성과를 제도 정치권에 위임하게 되었다. 여기서 유신독재 및 5공 청산의 과제는 오직 대선에서 누구를 선출할 것인가의 문제로 좁혀졌다. 즉 군부세력이 야당 세력을 포섭함으로써 지배블럭의 헤게모니가 지속 강화되었고, 저항세력은 이 강화된 헤게모니의 일부로 편입되고, 그 헤게모니 편입을 거부한 세력은 심각한 탄압을 받았다. 그래서 반공주의, 개발주의라는 유신의 주요 헤게모니의 기반은 흔들리지 남았고, 단지 유신체제가 ‘능률적 민주주의’ 이름으로 ‘자유 민주주의’를 침해한 부분, 5공화국이 유신체제를 연장한 부분만 청산되었다.

군부독재의 종식이 반드시 민주화를 가져오지 않을 수 있고, 민주화가 반드시 대통령 직선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민주주의는 대단히 이루기 어려운 프로젝트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87년 당시 한국의 학생, 지식인, 젊은이들이 목숨을 바쳐 민주화를 외쳤던 이유는 대중이 자신의 대표를 선출할 수 있고, 정치권력의 교체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 정치질서는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대세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6.29 선언 이후 ‘좌경세력 척결’을 빌미로 내세운 노동운동 탄압과 김영삼, 김대중 등 정치인들의 대선 행보에 대해 우려를 해온 민주화세력은 민주화의 유산(流産)을 심각하게 우려하였으며, 제도권 정치세력의 타협에 의한 87년 헌법이 ‘배반’의 전주곡임을 알아챘으나, 민주화를 대통령 직선으로 제한하려는 기성 정치권의 헤게모니를 흔들지 못했다.

박정희식 근대화, 경제성장, 그리고 국민총화의 논리는 파시즘적 국가주의의 성격을 갖는다. 그것은 경제성장이라는 절대절명의 가치 아래 모든 가치를 희생시키는 체제였다. ‘성장’의 담론은 자본주의 경제질서를 옹호하는 담론이자 동시에, 국가의 무제한적인 동원과 반인권적인 행동을 정당화하였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도 이 성장주의를 결코 넘어 서지 못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는 보수 정부 이상으로 성장을 강조했다.

"4월혁명을 유린한 5.16군사쿠데타"

김재홍(서울미디어대학원대 석좌교수/유신청산민주연대 상임대표)

군사독재 사령탑 보안사와 정치군벌 하나회

김재홍¹⁾(서울미디어대학원대 석좌교수/유신청산민주연대 상임대표)

1. 머리말
2. 정치군인 할거처 : 특무대 방첩대 보안사
3. 보안사의 직무편제와 정치개입
4. 보안사 장악한 정치군벌 하나회의 국권찬탈
- 10.26사건과 12.12군사반란...5.18광주항쟁과 6.10시민항쟁
5. 보안사의 친위쿠데타 대비 민간인사찰
6. 맺음말
- 합법적 폭력관리집단 군부의 과거사 청산

1) 필자 김재홍 :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동 대학원 정치학박사. 미국 하버드대 니만펠로 언론연구과정 수료. 동아일보 정치부 차장-논설위원. 경기대 교수-정치전문대학원장.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 제17대 국회의원-문광위 법안심사소위원장. 방송통신위 상임위원-부위원장. 한양대 특훈교수. (사)한국정치평론학회 회장-이사장. 서울디지털대 총장. 현재 서울미디어대학원대 석좌교수. 유신청산민주연대-유신50년청산위원회 상임대표.

1. 머리말

한국 현대정치사에서 32년에 걸친 군의 정치개입은 1961년 5.16군사쿠데타로 시작됐다. 쿠데타를 일으킨 정치군인들은 군사혁명위원회와 국가재건최고회의라는 간판을 내걸었다. 두 개 쿠데타 기구에서는 권력투쟁의 민낯인 이른바 반혁명사건이 연달아 불거지면서 초기에 가담한 여러 군부 인맥이 박정희 소장과 김종필 등의 육사8기 중심으로 정리돼 갔다. 쿠데타에 실병력을 동원한 것은 육사5기 출신인 채명신 소장의 5사단과 문재준 대령의 6군단 포병부대, 그리고 김동하 김윤근의 해병대였다. 육사5기는 장도영과 인연이 있었고 김동하 김윤근은 이북 군맥에 속했다. 이같은 실병력 동원을 기획해 쿠데타 전반을 조직 통제해 그룹이 김종필 등의 육사 8기였으며 이들이 박정희 직계였다. 5.16쿠데타는 초기 장도영 중장과 박정희 소장, 육사5기와 8기, 그리고 해병대 등 여러 세력이 가담했으나 두달도 안돼 장도영이 이른바 반혁명 사건으로 체포되는 등 초기에 박정희와 김종필 등의 육사8기 중심으로 개편돼 갔다.

쿠데타 세력 내부의 권력투쟁 과정에서 정적에 대한 감시와 반혁명 조작 등을 위해 김종필이 주도해 설치한 것이 중앙정보부였다. 이때만 해도 중앙정보부에 정치군인들이 현역 신분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군사정보사정기관으로 보안사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방첩대는 별도 정치 공작에 나서지 않았다. 중앙정보부가 정치군인들의 쿠데타 군정기구를 뒷받침하는 도구였다. 중앙정보부는 5.16쿠데타 세력의 내부 권력투쟁에서 박정희와 김종필 그룹이 주도권을 장악하는데 핵심 공작을 수행했으며 그후 지속적으로 박정희 정권 내내 정보공안통치의 본거지였다.

박정희는 1963년 이른바 민정이양 이후엔 중앙정보부를 정치영역과 대북한 정보활동으로 전문화하는 한편 군부 내 정보사정기관 역할을 보안사령부에 맡겼다. 중앙정보부가 군부 내 정보수집이 필요할 경우에도 직접 개입하지 않고 보안사를 통해서 하도록 서로 업무영역을 이원화했다. 이는 양대 정보공안기관이 상호 견제하도록 하여 권력집중을 막는 통치술이기도 했다.

중앙정보부의 후신인 안기부와 군 보안사의 이같은 역할분담과 권력 이원화는 전두환 5공정권 아래서 경계선이 무너지고 애매해진다. 중앙정보부가 10.26 박정희 살해사건의 주도 집단이었기 때문에 보안사를 주축으로 한 합동수사본부의 수사대상으로 전락한 이후 전두환 정권 아래서 상당기간 보안사가 국가정보기관의 수위에 서는 현상이 지속됐다. 보안사령관들이 전원 하나회 출신으로 전두환의 직계 장성이었기 때문에 정치군인들의 개인적 관계가 국가정보기관의 위상과 역할을 그렇게 결정지었다. 더구나 보안사령관으로 합수부장인 전두환이 법으로 금지된 중앙정보부장 서리를 겸임하여 정부의 장관급 회의 참석자가 되

면서 공식적으로 내각을 조정 통제하게 된다. 그후 전두환 정권 아래서는 그의 최측근인 장세동이 안기부장으로 재임한 기간 외에는 보안사령관이 '대통령 독대' 등을 통해 더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정치군벌 하나회의 국가권력 지배와 정치개입이 제도적으로 정점에 이르는 시기였다.

박정희와 전두환 정권 아래서 군의 정치개입과 국가권력 독과점은 중앙정보부와 보안사령부, 청와대 경호실과 비서실 등을 통해서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지만 특히 1979년 10.26 사건 이후 12.12 군사반란과 1980년 5.18광주항쟁에 대한 군의 살상진압 과정에서 군 병력의 동원 지령 등 보안사가 핵심역할을 감행했다. 당시 보안사는 사령관 전두환 소장을 위시해서 보안처장과 대공수사국장 등 지휘부가 모두 정치군벌 하나회 회원들이었다. 하나회가 보안사에 할거하면서 12.12 군사반란으로 군권을 탈취하고 이어 5.18 광주항쟁 유혈진압 등 일련의 내란을 기획하고 지령하여 정권을 찬탈하기에 이른 것이다.

박정희 정권은 5.16쿠데타 이후 정권에 대한 대학생과 종교인 등 시민사회의 민주화운동과 비판 목소리가 비등할 때마다 1964년 6.3 계엄령과 1971년 10.15 위수령, 그리고 1972년 10.17 유신선포 때 계엄령 등 도합 10차례에 걸쳐 군부대를 후방에 투입했다. 전두환 정권은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항쟁 진압 등 내란과정에서 극단적 군대 물리력을 동원했으며 1987년 6월 시민항쟁에 대해서는 그 살상진압의 트라우마를 넘어서지 못해 굴복하고만 것이다.

이 글은 군의 정치개입이 국민에 대한 발포라는 극단적 내란행위로 치달은 상황을 역사재판 차원에서 재조명하고 재단하기 위해 그 핵심 행위자인 보안사령부와 정치군벌 하나회 집단에 대해 해부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미 알려진 사실들과 관련 인물들의 행위 내용을 분석하여 아직 규명되지 않은 내란과정의 책임문제를 명료화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2. 정치군인 할거처 : 특무대·방첩대·보안사

대통령 박정희가 정치장교들의 정치개입을 문 열어 주면서 독재정치의 도구로 이용했던 것이 군 보안사령부였다. 박정희 정권은 5.16쿠데타 후 육군보안사령부라는 명칭으로 군의 정치개입을 본격화하는 군사조직을 가동시켰다. 그 전신은 해방 후 1948년 5월 조선경비대 총사령부 정보처의 특별조사과였다. 이 팀이 육군방첩대로 이름을 바꾸었다가 1950년10월

육군본부 직할 특무부대로 개편된다.

1951년 6.25 전쟁 중 특무부대장에 임명된 김창룡은 이승만 대통령과 독대하고 직보하는 등 군인으로서 육군본부 예하 부대장 신분이었지만 정치적 위상과 권력은 육군참모총장보다 훨씬 높았다. 당초 군사정보기구로서 임무란 북한의 대남간첩 활동과 대북 정보수집 등 반공 방첩이었으나 이승만의 신임을 업고 그에게 반대하는 야당과 정적들에 대한 사찰과 위협까지 일삼았다. 이승만 경무대의 비밀경찰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김창룡 특무부대는 6.25 전쟁 중 북한 인민군 점령지역에서 북측에 부역한 민간인들을 색출하고 징벌하기도 함으로써 공포와 원성의 대상이기도 했다. 특무부대장 김창룡은 그런 군사정보기구의 권력 남용과 전횡에 반감을 품은 특무부대 내부 부하들에 의해 총격을 받아 암살당하고 만다.

4.19 혁명 후 민주당의 장면 정부는 특무부대의 악명을 지우려고 다시 과거 육군방첩부대라는 명칭으로 환원시켰다. 그러나 장면 정부의 방첩부대는 군부 내 정부전복 음모를 제대로 탐지하지 못해 박정희 소장의 5.16 쿠데타를 방지하는데 실패했다.

박정희 정권은 1968년 육군보안사령부를 발족시키고 1977년 이를 육해공군 전체 군을 대상으로 삼는 국군보안사령부로 확대 개편했다. 1993년 3월 군부 개혁에 나선 김영삼 대통령은 군 정보사정기구의 영역을 넘어 민간 사찰과 야당 감시 등의 권력남용과 비행으로 지탄받은 보안사의 후신 기무사를 숙군의 우선순위로 삼았다. 김 대통령은 당시 권영해 국방장관에게, “기무사령관은 지금 중장이 하고 있는데 한 계급을 내리고 순수한 군 정보에 밝은 전문가를 써야겠어.”라며 “권력도 갖고 계급도 높으면 안돼”라고 말했다.²⁾ 권력은 직무에서 나오는 것이고 직무란 전문적 기능에 의해 설정되므로 따로이 직급이 높을 필요가 없으며 권력집중을 방지해야 한다고 나름의 권력관을 피력한 것이다. 사법시험을 통과한 검사의 직급이 행정고시를 치르고 임용된 정부 내 다른 행정공무원보다 높게 설정된 것은 하향 조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똑같은 논리로 검찰개혁에 적용돼야 할 것이다. 김영삼 정부는 보안사의 민간영역에 대한 정보수집과 방첩업무를 폐지하고 사령관의 계급도 중장에서 소장으로 낮추었으며 다시 7개월여 만에 2차로 교체하면서 육사 출신이 아닌 ROTC 출신인 임재문 준장을 임명했다.비육사 출신의 첫 보안사령관인 임재문 준장은 4년 반 이상 재임해 김영삼 정부와 임기를 같이하면서 소장으로 진급했고 전역 직전 중장 계급을 달았다.

기무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개칭됐다. 이처럼 방첩대-특무부대-방첩부대-보안사-기무사-군사안보지원사로 명칭이 연달아 개칭되는 군 정보사정기구의 기구한 운명은 순수한 직무 범위를 일탈해 정치개입과 권력남용을 벌여 온 과거사로부터 받은 업보라 할 것이다.

2) 김영삼 대통령의 하나회 출신 육군참모총장과 보안사령관 교체로 시작된 군 숙정에 대해서는 다음 책을 참조. 김재홍, 『군2 : 핵 개발 극비작전』(서울 : 동아일보사, 1994), 308-309쪽.

3. 보안사의 직무편제와 정치개입

1) 보안사의 직무편제·정보처에 정치과-언론과-학원과-종교과 등

보안사의 조직을 보면 본부의 직무편제와 함께 군의 각급 부대단위에 파견대를 배속시켰으며 군 외부 전국 주요 지역에 지구대를 설치했다. 보안사가 개혁되기 전 1980년대 군 정보사정기구로서 전성기를 맞았을 때 본부의 편제는 크게 두 개 기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군 내부 방첩 및 지휘관 동향보고를 주임무로 하는 보안처가 있고 정치 언론 대학 종교 등 다양한 민간영역에 대한 정보수집과 대간첩 업무를 담당하는 정보처를 두었다. 군내 각급 부대의 파견대 활동은 보안처가 지휘했으며 군부대 외부 지역 지구대는 정보처 산하였다. 보안처는 군 정보사정기구로서 본연의 직무를 위한 조직편제라 할 수 있지만 군을 지배하는 권력을 장악한 부서로 12.12 군사반란 등의 부대 동원은 여기서 지령을 내렸다. 정치권과 대학가, 그리고 시민사회의 비판활동과 시위 등을 진압하기 위해 군 부대를 투입할 때 지령을 보내는 부서가 보안처였다.

보안사의 정치개입과 민간영역 침범은 주로 정보처에서 벌어졌다. 정보처의 편제를 보면 △정치과 △경제과 △언론과 △학원과 △종교과로 이루어졌다.³⁾ 군사정보부대에 정치권이나 언론, 그리고 대학 등의 학원 동향을 사찰하고 조정통제하는 부서를 두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였다. 보안사도 박정희 정권 때부터 중앙정보부나 경찰 정보대와 똑같이 언론사와 대학에 정보원을 상주시켜 왔으며 그 담당부서가 정보처였다.

군 내부와 민간영역에 대한 두 개 기둥의 정보활동을 힘으로 뒷받침하는 기구가 대공처로 수사와 공안조작이 주임무였다. 10.26 사건 당시 박정희를 권총 살해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을 체포해 심문 조사했던 기구가 합동수사본부의 핵심인 보안사 대공처 수사국이었다.⁴⁾ 당시 대공처 수사국장이 육사 18기의 하나회 핵심인물인 이학봉 중령이었다. 이 중령은 10.26사건 수사 직후 대령으로 진급해 대공처장으로 보임된다.

인사처는 통상적인 내부 인사와 인력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다. 그러나 12.12 군사반란 당시 서울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들어가 계엄사령관이던 정승화 총장을 불법연행한 두 명의 대령 중 한 사람이 하나회로 보안사 인사처장이던 허삼수 대령이었다. 그런 행동은 인사처장의 통상 업무가 아니며 하나회 회원으로서 군사반란의 임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3) 보안사의 편제에 대해서는 아래 책을 참조.

김재홍, 『박정희의 후예들 : 누가 그들을 다시 부르는가』 (서울 : 책보세, 2012), 47쪽.

4) 보안사 대공처의 김재규 심문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김재홍, 『군2 : 핵 개발 극비작전』, 112-118쪽.

보안사에서 4개 처외에 사령관을 보좌하는 측근조직으로 비서실이 있으며 전두환 사령관의 비서실장은 육사17기의 하나회 핵심 중 한명인 허화평 대령이었다. 허 대령은 나중에 군의 정치개입을 정당화하는 주장을 폈으며 이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2) 보안사령관의 권력구조 속 위상

보안사령관을 비롯한 역대 군사정보사정기구의 수장들을 살펴보면 그가 재임한 시기 대통령과의 개인적 인연에 바탕한 신뢰관계가 권력구조 속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역할을 좌우한다. 그만큼 그들의 직무와 역할이 제도화돼 있지 않고 정치적으로 운용된 것이다. 해방 후 군사정보사정기구는 초기인 이승만 정권 때 방첩대와 특무대, 5.16 쿠데타 후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 아래서 보안사, 노태우 정권과 김영삼 정권의 기무사, 그리고 문재인 정권 때 군사안보지원사로 명칭을 바꾸어 왔다. 명칭 변경 뿐 아니라 정권에 따라서 군사정보사정기구의 성격과 활동상이 차이가 많았다. 이중 정치개입과 공안조작으로 가장 악명이 높았던 것은 이승만 정권 시기 특무대와 박정희-전두환 정권 아래 보안사였다. 노태우 정권 시기 보안사는 민간사찰이 폭로돼 엄청난 파문이 일었다. 이 사건으로 대통령 노태우는 국방장관과 보안사령관을 경질하고 보안사의 명칭을 더 이상 사용하기가 어려워 기무사로 개명한다. 그후 문재인 정권은 기무사 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명칭을 다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고쳐 업무 영역을 명확하게 정했다. 군사정보사정 기구는 그 수장이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과 어떤 관계를 가지며 역할을 수행하느냐에 따라 위상이 크게 차이난다. 아래 사령관 명단과 재임시기 대통령을 대조해 분석함으로써 군사정보사정기구의 권력구조 속 위상을 가늠할 수 있다. 군사정보기구 사령관의 군 경력과 함께 전역 후의 직함이 그것을 말해 준다.

《역대 군사정보사정기구의 부대장》

<특무부대장>

1대 김형일 대령. 1950.10.~1950.12. (예)중장. 신민당 사무총장. 6,7,8,9대 국회의원.

2대 백인엽 준장. 1950.12.~1951.1. (예)중장. 인천대 학교법인 선인학원 이사장.

3대 이한림 준장. 육사2기. ~1951.4. (예)중장. 육사교장. 야전군사령관.

5.16쿠데타 반대로 구금. 박정희 회유로 건설부장관, 터키-호주 대사.

4대 김종면 준장. ~1951.5.

5대 김창룡 준장~소장. 육사3기. ~1956.1. (예)소장. 부하에 피살, 중장 추서.

6대 정인택 준장. 육사3기. ~1957.9.

7대 김재현 준장. 육사2기. ~1959.10.

8대 하갑청 준장. 육사2기. ~1960.5.

9대 이소동 준장. 육사2기. ~1960.6. (예)대장. 5.16 후 치안국장. 군사령관.

<육군방첩부대장>

10대 박창록 준장. 육사3기. 1960.6.~1961.4.

11대 이철희 준장. 육사2기. ~1961.6. (예)소장. 중정 차장. 국회의원(유정회).

12대 김재춘 준장. 육사5기. ~1962.7. (예)소장. 합동수사본부장. 중정 부장. 무임소장관.

국회의원. 5.16민족상 이사장.

13대 정승화 준장. 육사5기. ~1964.1. (예)대장. 육사교장, 1군사령관, 육참총장.

통일민주당 상임고문. 성우회 회장.

14대 박영석 준장. 육사5기. ~1965.3.

15대 윤필용 소장. 육사8기. ~1968.2. (예)소장. 최고회의 의장 비서실장대리.

수경사령관. 도로공사 사장(1980-86). 담배인삼공사 이사장(1987-93)

<육군보안사령관>

16대 김재규 중장. 육사2기. ~1971.9. (예)중장. 호남비료 사장. 국회의원, 건설부장관, 중정부장. 10.26 대통령 살해.

17대 강창성 소장. 육사8기. ~1973.8. (예)소장. 해운항만청장. 1980내란협조 거부 투옥. 국회의원. 민주당 부총재 겸 총재권한대행. 한나라당 부총재.

18대 김종환 중장. 육사4기. ~1975.2. (예)대장. 합참의장. 내무장관. 향군 회장.

<국군보안사령관>

19대 진중채 중장. 육사8기. ~1979.3. (예)대장. 수경사령관. 2군사령관.

진해화학 사장. 12.12와 5.18 관련 피소됐으나 불기소 처분.

20대 전두환 대장. 육사11기. ~1980.8. (예)대장. 하나회 조직자.

최고회의 의장실 민원비서관. 중정 인사과장. 1공수특전 여단장. 대통령경호실 차장보.

1980년 내란 주범, 10.26 합동수사본부장. 국보위 상임위원장. 중정부장 서리 겸임.

11,12대 대통령. 민정당 총재. 국가원로자문회의 의장.(1988)

21대 노태우 대장. 육사11기. ~1981.7. (예)대장. 하나회 조직자.

방첩대 정보장교, 방첩과장. 9공수특전 여단장. 대통령경호실 차장보. 1980년 내란 중

범. 수경사령관. 정무제2장관. 체육부-내무부 장관. 대한체육회장. 민정당 총재. 국회의

원. 13대 대통령. 민자당 총재.

22대 박준병 대장. 육사12기. ~1984.7. (예)대장. 하나회. 국회의원.

민정당 국책조정위원장, 사무총장. 자민련 부총재, 사무총장. 아태환경연맹 회장.

23대 안필준 대장. 육사12기. ~1985.6. 하나회. 사단장, 군단장.

청소년연맹 총재. 석탄공사 총재. 보사부장관. 대한노인회 회장.

24대 이종구 대장. 육사14기. ~1986.7. 하나회. 육본 작전처장(1980). 사단장.

수방사령관. 2군사령관. 육참총장. 국방장관. 성우회 회장.

25대 고명승 대장. 육사15기. ~1987.12. 하나회. 대통령근위부대 33경비단장,

경호실 차장. 사단장. 수방사령관. 3군사령관. 신한국당 전북도지부장.

26대 최평욱 중장. 육사16기. ~1988.12. (예)중장. 하나회.

국보위입법회의 사무처장. 사단장. 군단장. 육군교육사령관. 산림청장. 철도청장.

27대 조남풍 대장. 육사18기. ~1990.10. 하나회. 1공수여단장. 수도기계화사단장.

1990년9월 윤석양 이병 보안사 민간사찰 폭로로 경질. 육군교육사령관.

1군사령관. 향군회장.

<국군기무사령관>

28대 구창회 대장. 육사18기. ~1991.12. 하나회. 12.12군사반란 병력동원의

9사단 참모장. 3군사령관. 1993년5월 하나회 숙군으로 예편.

29대 서완수 중장. 육사19기. ~1993.3. (예)중장. 하나회. 특전사령관.

1993년 5월 하나회 숙군으로 예편.

30대 김도윤 소장. 육사22기. ~1993.10. 기무사 국방부 파견대장. 기무사 참모장.

31대 임재문 중장. 학군3기. ~1998.3. 하나회 숙군 후 준장으로 기무사령관.

32대 이남신 중장. 육사23기. ~1999.10. (예)대장. 사단장. 군단장. 3군사령관.

합참의장. 육사 총동창회장.

33대 김필수 중장. 육사26기. ~2001.10. (예)중장. 사단장. 수방사 부사령관.

합참 작전기획부장.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34대 문두식 중장. 육사27기. ~2003.4. (예)중장. 국방부 기무부대장, 기무사 참모장.

국회의원총선 출마. 한국군사학회 회장. 원광대-세종대 석좌교수.

35대 송영근 중장. 육사27기. ~2005.2. (예)중장. 사단장. 3사관학교장.

국회의원. 국회 국정원개혁특위 위원.

36대 김영한 중장. 육사29기. ~2006.12. (예)중장. 사단장. 합참 전력기획부장.

37대 허평환 중장. 육사30기. ~2008.3. (예)중장. 사단장. 논산훈련소장.

우리공화당 공동대표.

38대 김종태 중장. 3사6기. ~2010.4. (예)중장. 사단장. 19,20대 국회의원.

39대 배득식 중장. 육사33기. ~2013.4. (예)중장. 사단장. 육본 전략기획부장.

40대 장경욱 소장. 육사36기. ~2013.10. (예)소장. 국군정보사령관.

합참 정보참모부장. 주이락크 대사.

41대 이재수 중장. 육사37기. ~2014.10. (예)중장. 사단장. 육본 인사사령관.
3군 부사령관. 박지만의 중앙고-육사 동기.
42대 조현천 중장. 육사38기. ~2017.9. (예)중장. 육본 인사기획처장. 사단장. 육사교장.
국군 사이버사령관. 박근혜 대통령탄핵에 대해 계엄령이나 위수령을 발동한다는 기무사의 계엄령문건이 공개됐으며 이에 수사가 시작되자 미국으로 도피중.
43대 이석구 중장. 육사41기. ~2018.9. (예)중장. 사단장. 합참 작전기획부장.
국방대 총장. 주아랍에미리트 대사.
44대 남영신 대장. 학군23기. ~2019.4. 7공수여단장. 사단장. 특수전사령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준비단장. 육참총장

<군사안보지원사령관>

44대 남영신 대장. 학군23기 ~2019.9.
45대 전제용 공군중장. ~2021.9. (예)중장. 기무사 감찰실장. 공군103기무부대장.
군사안보지원사 참모장.
직무대리 박재갑 해군소장. 해군학군35기. 2021.9.~2021.10. (예)소장. 기무사 보안
감시단장. 군사안보지원사 참모장.
46대 이상철 중장. 학군28기. 2021.10~2022.5. (현)중장. 2군 작전처장. 사단장.
47대(현) 황유성 중장. 육사46기. 2022.5.~현재. (현)중장. 기계화보병여단장. 사단장.
육본 기획관리참모부장-군수참모부장.

명단에서 보듯이 1980년 전두환 정권 이후 보안사령관은 전원이 하나회였다. 전두환 정권 아래서는 보안사령관 뿐 아니라 수방사령관이나 특전사령관 등 군의 핵심요직에 하나회가 아니면 보임되기 어려웠다. 군부의 성골 높음을 한 하나회만이 보안사령관을 거쳐 군 사령관으로 진출하면서 대장 계급을 달았다. 1987년 6월 시민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거쳐 노태우 정권이 출범한 뒤 5공청산 바람이 불었을 때 보안사령관이던 최평욱 장군만 중장으로 예편한 유일한 경우다.

김영삼 대통령의 군부 숙정 이후 기무사령관 자리는 중장으로 전역하는 코스였다. 기무사령관을 지낸 뒤 대장까지 진급한 경우란 김대중 정부 때 이남신 장군이 유일했다. 이남신 대장은 기무사령관에 보임되기전에 야전 군단장을 거쳐서 대장 승진 필수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다른 기무사령관들은 대체로 사단장을 마친 야전 군인 출신으로 군단장 경력을 갖지 못했고 이 보직을 끝으로 전역했다. 보안사가 권력도 가지면서 높은 계급을 누리는 시대는 김영삼 문민정부의 군부 숙정으로 마감한 것이다.

4. 보안사 장악한 정치군벌 하나회의 국권찬탈

- 10.26 사건-12.12 군사반란, 5.18 광주항쟁-6.10 시민항쟁과 보안사

1) 1973년 하나회 수사한 보안사령관의 좌천

대통령 박정희의 5.16쿠데타와 유신선포 이후 역사에 기록할만한 큰 사건으로 1979년 10.26 대통령살해와 12.12 군사반란, 그리고 1980년 5.18 광주항쟁 살상진압과 1987년 6월 시민항쟁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중대한 정치사적 고비마다 보안사가 정국의 향배를 좌우했고 그 보안사의 핵심지휘부는 모두 하나회가 차지하고 있었다. 대통령 박정희가 정규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의 지하 사조직을 친위대로 키워 이용하고 군벌화 하도록 비호한 정치군인 집단이 하나회였다.

대통령 박정희가 정규육사 출신 지하 사조직인 하나회를 비호했다는 것은 윤필용 사건을 수사한 당시 보안사령관 강창성의 증언에서도 드러난다.⁵⁾

하나회가 처음 군 내부에 알려진 것은 보안사의 윤필용 사건수사를 통해서였다. 1973년 3월 윤필용 수경사의 인사담당 장교들을 수사하던 보안사 Y수사반은 반장인 백동림 중령(육사15기 후에 김재규 수사담당)에게 “육사 출신들이 푹푹 멍쳐서 윤 소장을 업고 다 해먹은 모양입니다”고 보고했다.⁶⁾ 수사관은 백 중령에게 하나회의 군내 주요보직 독점과 인사 압력 등을 보고했고 백 중령은 이를 강창성 사령관에게 직보한다. 윤필용 독직사건은 수경사가 위치한 곳을 ‘필동 육군본부’라고 부를만큼 장교들에 대한 인사전황이 핵심이었다. 곧바로 Y수사반에 하나회의 규모와 지금까지의 비밀활동에 대한 수사 지시가 떨어졌다.

윤필용 사건 1차수사에서 구속된 10명 중 수경사 참모장 손영길과 권익현 뿐 아니라 윤필용의 전황을 처음 청와대 경호실장 박종규에게 제보했던 1공수여단장 전두환 준장과 전방 연대장 노태우 대령 등 육사11기 선두주자들이 핵심 수사대상으로 떠올랐다. 또 청와대 최근접 근위부대장인 수경사 30대대장 이종구 중령과 윤필용의 비서실장 출신으로 전방 포병 대대장으로 나가 있는 박정기 중령, 그리고 바로 보안사 인사과장인 배명국 중령 등 육사 14기의 중심인물들이 11기 아래 중간보스로 드러났다. 강창성은 보안사 안에도 수경사를 담당하는 506부대장 정동철 대령(육사12기)과 허화평, 허삼수 소령 (육사17기) 등이 요직에 포진해 있는 것을 보고 크게 놀랐다.

5) 1973년 3월 보안사의 윤필용 수경사령관 사건과 하나회에 대한 수사는 다음 책을 참조.

김재홍, 『군 1 : 정치장교와 폭탄주』, 232-256쪽.

6) 위의 책, 251쪽.

수사반은 전두환 노태우에게는 수사관을 보내 진술을 받도록 하고 총무격으로 드러난 이종구 중령을 보안사로 소환했다. 수사반은 우선 지하사조직 하나회의 명단을 입수하는 일이 급선무였다. 그러나 이종구는 “친목모임의 연락을 맡아 명단을 캐비닛에 두고 있다가 분실했다”고 끝내 버티었다.⁷⁾

강창성은 의외로 큰 지하사조직이 군내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다시한번 놀랐다. 그는 박정희에게 윤필용사건의 수사 결과를 보고한 뒤 전두환 노태우 정호용을 비롯한 하나회 장교들에 대한 수사결과를 박정희에게 덧붙여 보고했다. 강창성은 Y수사반이 파악한 육사11기부터 14기까지 하나회 핵심 20여명의 명단을 내놓았다. 명단을 들여다 보던 박정희는 “그냥 두고 가라”고 짧게 말했다.⁸⁾ 강창성은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다. 군 장교들의 비밀사조직에 대해 너무 미온적인 반응이었다.

그후 하나회 수사는 진행됐지만 아무런 조치도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강창성 보안사령관만 여기저기서 협공을 받았다. 며칠 후 윤필용의 후임으로 수경사령관이 된 진중채 소장이 전화를 걸어 왔다.

“앞으로 수경사 요원에 대해 조사할 일이 있을 때는 내 동의를 구해서 해 주시오”

두 사람은 육사8기 동기생으로 군 경력으로 보면 강창성이 앞섰지만 실제 군내 파워가 달랐다. 강창성은 경기 포천 출신으로 경북 포항 출신의 영남군벌 실세인 진중채를 상대하기에 역부족이었다.

하나회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8월7일, 강창성은 청와대 측 연락을 받고 태릉골프장에 나갔다. 대통령 박정희, 육사교장 최우근(육사3기), 경호실장 박종규와 함께 라운딩을 했다. 박정희는 둘이만 있는 자리에서 강창성에게 이렇게 말했다.

“강 장군 말이야, 며칠 전에 서종철, 진중채 장군이 내 방에 왔었어. 강 장군을 그 자리에 그대로 두면 경상도 장교의 씨가 마르겠다고 그래.”

다음날 강창성 소장은 이민우 육참차장으로부터 한직인 3관구사령관으로 좌천당하는 인사 명령을 통보받는다. 하나회 수사는 그것으로 끝이었다. 박정희와 영남군벌의 비호가 아니었다면 군내 지하사조직을 꾸려 비밀활동을 벌이면서 윤필용 수경사령관과 같은 실력자를 등에 업고 인사특권을 누리 온 하나회 수사가 유아무야로 종료될 일은 아니었다. 윤필용 또한 그로부터 18개월 후 형집행 정지로 풀려난다. 하나회 후원자였던 그는 전두환 정권 아래서 도로공사 사장과 담배인삼공사 이사장을 지냈다.

7) 위의 책, 253쪽.
8) 위의 책, 254쪽.

2) 한국현대정치사 좌지우지한 보안사와 정치군벌 하나회

10.26 박정희 살해사건이 벌어졌을 당시 보안사령관은 우연찮게도 그의 근위장교 출신이며 친위대 하나회 조직자인 전두환 소장이었다. 전두환은 대령 때 청와대를 지키는 최근접군 부대인 수경사 30대대장이었으며 준장 때 경호실 작전차장보를 지냈다. 전형적인 근위대 출신인 그가 보안사령관으로 임명된 것 또한 두 계단을 뛰어넘은 파격인사였다. 1973년 3월 불거진 수경사령관 윤필용 직권남용 사건 이후 박정희는 군 실세들인 보안사령관과 수경사령관의 위계서열을 정할 필요를 느꼈다. 일선 사단장을 마치고 수경사령관이나 군단장을 거친 장성 중에서 보안사령관을 임명함으로써 보안사가 우위에 서도록 한 것이다.⁹⁾ 그런데 전두환은 전방 1사단장에서 소장 2차 보직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보안사령관으로 직행했다. 군 내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파격 인사였다. 당시 주요 군 인사는 서종철, 노재현, 진중채 등 영남군벌 3인방이 사전 논의해 국방장관을 통해 박정희에게 상신하곤 했다.

10.26 사건을 앞둔 1979년 2월 중순, 국방장관 노재현이 전두환 신임 보안사령관 인사안을 휴대하고 청와대로 들어갔다. 박정희는 인사자력표를 들여다 보다가 한마디 했다.

“이제 막 사단장을 마쳤군. 너무 이르지 않아...?”¹⁰⁾

통상 두명 이상의 복수안에 순위를 매겨 올려야 하는 인사안이 전두환 소장 단독후보로 돼 있었다. 영남군벌들과 이미 구수회의에서 의견을 모은 노재현은 소신있게 밀었다.

“각하, 그만한 적임자를 따로이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서종철 특보나 현임인 진중채 사령관도 같은 의견입니다.”¹¹⁾

하나회의 후원세력이 사전 합의한 전두환 보안사령관 인사안은 이렇게 박정희의 결재를 받았다. 영남군벌 3인방이 아니었다면 전두환의 경력으로 보아 시기상조인 파격 인사였다.

그해 10.26 사건이 터지자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을 체포하고 심문 조사한 것은 보안사였다. 계엄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선포하기 전으로 엄연히 민간인 신분인 중앙정보부장 김재규를 군 수사기관이 체포하고 수사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컸다. 이것은 나중에 김재규 군사재판에서 변호인단이 강력히 문제 제기를 했으나 묵살되고 만다.¹²⁾

9) 김재홍, 『군 1: 정치장교와 폭탄주』(서울: 동아일보사, 1994), 309쪽.

10) 위의 책, 310쪽.

11) 당시 서종철은 육참총장과 국방장관을 거쳐 청와대 국방안보특보였고 진중채는 현직 보안사령관으로 2군사령관 영전이 내정돼 있는 군부 최고 실력자들이었다. 위의 책, 311쪽.

12) 김재규 군사재판 첫 법정에서 변호인단이 지적한 것은 두가지였다. 첫째, 비상계엄령이 계엄법 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둘째, 민간인 신분인 김재규 피고인이 계엄령 선포 이전의 행위로 군사재판을 받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조항에 어긋난다는 것이었다. 이에 관해서는 김재규 군사재판의 녹취록을 바탕으로 저술한 다음 책을 참조.

김재홍, 『박정희 살해사건 비공개진술 쏠쏠음 상: 운명의 술 시바스』(서울: 동아일보사, 1994),

국방부 청사에 가 있던 김재규는 헌병대와 보안사 요원에 의해 체포돼 보안사 대공수사국 산하 서빙고분실에서 조사를 받는다. 이때 보안사는 하나회 조직자인 전두환 소장이 사령관으로 임명된 후 주요 지휘부 간부들이 모두 하나회 핵심들로 구성돼 있었다. 비서실장 허화평 대령은 육사17기 하나회, 보안처장 정도영 대령은 육사14기 하나회, 인사처장 허삼수 대령은 육사17기 하나회, 대공수사국장 이학봉 중령은 육사18기 하나회였다. 당시 보안사 지휘부 중 육사17기인 정보처장 권정달 대령만 하나회 회원이 아니지만 함께 일할 수 있는 ‘지원세력’으로 분류되는 인물이었다.¹³⁾

이렇게 짜여진 전두환의 ‘하나회 보안사’가 12.12 군사반란을 주도하고 군권을 탈취한 후 비상계엄령 아래 합동수사본부를 주도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실권을 장악하게 된다. 전두환은 1980년 4월 14일 중앙정보부장 서리로 취임, 보안사령관직과 함께 겸직했다. 이는 겸직 금지가 명시적으로 규정된 중앙정보부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였다. 전두환의 중정부장 서리 겸직이 갖는 정치적 의미는 그가 대통령 주재의 주요각료 간담회 등에 정규 참석자가 됐으며, 공식적으로 내각을 통제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었다. 박정희 유신 체제에서 중앙정보부장은 중요한 정국 사안에 대한 관계기관대책회의나 주요 각료 간담회에서 중심적 지위였다.

당시 국무총리였던 신현확은 1988년 12월 국회 광주특위 청문회에서 내각과 관료들이 주도권을 행사하려고 노력한 마지막 시점이 1980년 3월이었다고 증언했다. 전두환이 중정부장 서리를 겸직하고 주요 각료회의에 참석하기 시작한 4월 중순부터는 그가 내각을 실질적으로 통제했다는 얘기가.

전두환을 중심으로 하나회 및 하나회 후원세력과 지원세력으로 이루어진 신군부는 1980년 5.18광주항쟁을 살상진압한 뒤 5월31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한다. 의장은 대통령 최규하였지만 전두환이 상임위원장으로 실권을 쥐고 있었다. 전두환은 국군보안사령관 겸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장 겸 중앙정보부장 서리 겸 국보위 상임위원장으로 군부와 정보수사기관과 내각 조정통제권을 모두 손에 넣은 것이다. 바로 이 체제가 5.17 비상계엄 확대와 5.18 광주항쟁 살상진압을 지휘한 내란집단의 통수부였다. 다시 말하면 1980년 5월 전후 내란을 주도한 신군부의 실체는 그 수괴인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하나회 및 그 후원세력과 지원세력이었다.

그로부터 7년 후 전두환 정권 말기인 1987년 6월 시민항쟁이 터졌다. 당시 군부와 경찰의 물리적 진압을 감행할만한 정권측의 통제력은 충분했다고 평가된다. 6월10일부터 18일사이 서울과 부산의 시민학생들에 의한 시위사태는 경찰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다. 청와대

13) 하나회는 군 장교들을 자신들에 대한 태도에 따라 네 개 그룹으로 분류했다. 하나회 회원은 핵심세력이며, 후원세력-지원세력-견제세력으로 나누었다. 서종철, 노재현, 진중채와 같은 영남군벌의 선배장성은 후원세력으로 분류했다. 이에 대해 다음을 참조.

참모들과 치안본부, 내무부, 국방부 관계자들은 주로 보안사령관 고명승 중장에게 전화해 정국 대처를 논의했다. 공안정보기관의 수장 중에서 안기부장으로 막강 실세이던 육사16기 하나회 장세동은 그해 1월 발생한 서울대생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의 책임으로 5월26일 경질된 뒤여서 무게중심이 육사15기 하나회 핵심인 보안사령관 고명승에게로 급격히 옮겨져 있었다.

군병력 투입을 하려면 보안사령관이 대통령 전두환에게 건의해야 한다. 고명승은 “80년 5월 광주항쟁이 떠올랐으며 순간 숨이 막히는 듯한 긴장감에 사로잡혔다”고 털어놓았다.¹⁴⁾ 그는 “80년 5월 광주를 겪은 전 대통령은 군 병력 동원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았다”고 술회했다. 그는 정국상황 대처를 묻는 미국 측 인사들에게도 군 동원은 없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했다고 밝혔다.

6.10 시민항쟁의 승리는 이렇게 5.18 광주항쟁에 대한 살상진압을 주도적으로 경험한 하나회 집단이 그 트라우마에 눌러 강제진압을 포기함으로써 얻어진 측면도 무시할 수 없었다.

5. 보안사의 친위쿠데타 대비 민간인 사찰

- 1990년 보안사, 주요인사 1300여명 체포준비 ‘청명계획’

보안사의 정치개입은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이루어졌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반헌법적이고 징벌해야 할 것이 야권 정치인 및 비판적 언론인과 종교인과 문화예술인 등 민간인에 대한 사찰이었다. 군사독재정권 아래서 군사정보사정기관의 권력남용과 비행은 짐작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사찰은 계엄령 발동 등 정국상황에 따라서는 주요인사들을 체포하기 위한 준비작업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더 심각한 문제였다.

보안사가 민간인 사찰을 감행해 온 사실이 1990년 10월4일 보안사 소속 윤석양 이병에 의한 양심선언으로 폭로되자 일반의 상상을 초월하는 광범한 사찰대상자 명단과 조직적인 비행에 국민여론은 경악하는 목소리로 들끓었다. 윤석양 이병은 사찰대상자 명단에 대해 “김대중 평민당 총재, 김영삼 민자당 대표최고위원, 이기택 민주당 총재 등 여야 정치인과 연

14) 1987년 6월 시민항쟁 당시 보안사령관이던 고명승 씨는 필자와 단독 인터뷰를 가진 자리에서 광주항쟁 진압에 생각이 미치자 숨막히는 긴장감을 느꼈다고 털어놓았다. 김재홍, “6.29 당시 보안사령관 고명승 씨에게 듣는다,” 동아일보, 1991년 6월29일자; 김재홍, 『군부와 권력』 (서울: 나남, 1992), 181-184쪽.

론계, 학계, 종교계, 노동계, 문화예술계, 대학가 등의 주요 인사 천3백여명”이라고 공개했다.¹⁵⁾ 뿐만 아니라 이것은 2007년 7월 국방부 과거사청산위원회 조사에 의해 공안정국 상황에 따라 친위쿠데타 계엄령이 발동될 경우 민주화운동계 주요인사들을 체포하기 위한 상세한 실행계획임이 밝혀져 더 큰 충격을 던졌다.

윤석양 이병은 강원도 철원지역의 3사단에 복무하던 중 대학 재학시 혁명적 노동자계급투쟁동맹(혁모맹)에 참여한 것 때문에 보안사에 연행돼 서빙고분실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후 그는 서빙고분실에서 강제로 학원사찰 업무를 담당했다. 윤 이병은 보안사의 민간인사찰 대상자 명부를 보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수 없었다. 9월23일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 암호명 ‘청명계획’ 대상자 명부(청명카드)와 플로피디스크를 품에 넣고 탈영한 그는 서울에서 양심선언을 통해 이를 폭로했다.

청명카드에 적힌 1300여명 명부를 보면 각계의 지도급 주요인사가 망라돼 있다. 심지어 당시 3당합당으로 여당인 민자당의 대표최고위원인 김영삼 의원까지 포함돼 있어 그가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과 계엄령 발동시 체포대상인 청명카드에 적힌 각계 주요인사는 다음과 같다.

- 정계
 - △평민당의 김대중 문동환 박영숙 이상수 정대철 정상용 이해찬 조세형 조윤형 등 현역 국회의원 70명 중 69명과 임채정 김홍일 문희상 장영달 등 원외 인사
 - △민자당 민주계 의원으로 김영삼 김덕룡 김동영 서청원 등 13명
 - △민주당의 노무현 이기택 이철 등 현역 의원 6명
 - △통합추진협의기구 소속 이부영 박계동 김도연 등 7명
 - △전직 의원으로 홍사덕 장기욱 조순형 이용희 등 16명
- 학계
 - △대학교수 : 강만길 김진균 김홍명 백낙청 이만열 이문영 송기숙 장을병 김수행 한완상 이삼열 박현채 염무웅 등 39명.
 - △전교조 : 윤영규 이부영 이근복 이강기 김민곤 윤병선 윤광장 유상덕 등 27명.
- 언론계
 - 송건호 임재경 리영희 김태홍 이효재 홍성우 황인철 장윤환 성유보 김종철 신홍범 노향기 박원순 박화강 권영길 이근성 김중배 류근일 윤재걸 황헌식 안동수 등 28명

15) 1990년 10월5일자 도하 신문들 보도기사 참조.

- 변호사
 - 이기홍 김은집 유현석 박인제 한승헌 고영구 주영수 정기호 정성철 조준희 홍남순 조영래 문재인 등 13명.

- 종교계
 - △가톨릭 : 김수환 윤공희 김승훈 함세웅 문규현 송기인 남정현 문국현 정호경 장용주 조장윤 정진석 유흥식 이설 이기선 강기갑 기춘 조현순 윤순녀 이명준 등 85명.
 - △ 성공회 : 김성수 윤정현 임태섭 등 3명.
 - △ 개신교 : 박형규 원형규 조승혁 최인규 김경식 모갑경 김동완 홍근수 박일성 박영모 김영수 안병무 안기성 심상봉 강문규 권호경 이우정 김지길 김상근 등 89명.
 - △ 불교 : 송경섭(월주) 이청화 이용성 법성 이영철 목우 등 6명.

- 노동운동
 - 이태복 박무영 단병호 문성현 홍영표 이석행 이흥석 방용석 배일도 권영국 권영목 손석형 박노해 노재열 나현균 현기대 황재철 조철우 정윤광 정성희 정선순 등 190명.

- 농민운동
 - 임수태 하도암 천익출 이태령 이응주 황문성 홍번 박상률 박동택 박기호 남홍우 서준석 소영호 윤치영 박기식 노병식 나상기 허완봉 하연호 권종대 등 61명.

- 문화예술계
 - 신경림 김용택 이문구 김정한 김남주 문병란 조태일 홍성담 함영희 나병식 오종우 윤정모 남정현 김언호 김영현 임현영 이민우 고지형 김윤수 김정현 김정환 등 69명.

- -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오충일 이학영 이창복 김근태 문익환 김현장 등 43명
 - △진보정치연합 유인태 이강철 김부겸 제정구 정태운 등 17명 △민주정치연합 송재호 등 5명 △민주의당 정명환 등 3명 △한겨레민주당 오원진 1명 △자민통 유인호 김규동 2명 △민주자주통일중앙협의회 유선홍 이천재 등 15명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윤정원 등 9명 △민주화운동청년연합 박우섭 최교진 채만수 연성수 등 22명.

- 기타
 - 최열(공추련) 윤춘광(제주민협) 김정권(김해민주화협) 정동년(5.18추위) 전계량(5.18유족회) 조성우(평화연구소) 이우재(농어촌사회연) 박석률(전남사회문제연) 등 133명.

- 학생운동
 - 대학총학생회 간부 : 백태웅 손용후 정대화(서울대) 오영식(고려대) 임종석(한양대) 임수경(외국어대) 이기우(성균관대) 강동규(경희대)이귀혜(이화여대) 박상현(경기대) 최인호(부산대) 이규봉(경북대) 김승남(전남대) 신영대(전북대) 허태정(충남대) 등 198명.

● 남민전 관련자

홍세화 홍영표 김영옥 백정호 김경중 서혜란 차성환 등 56명.

● 민청학련 관련자

김경남 백운선 박혜숙 안양노 신금호 장현준 전재성 황현승 박석운 등 28명.

한편 노무현 정부의 임기가 6개월여 남은 2007년 7월24일, 국방부 과거사위원회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보안사 민간인 사찰사건 조사결과 보고서”를 언론에 발표했다. 보안사 3처가 1989년 상반기에 계엄령이 발동될 것에 대비해 사회 주요인사들을 검거하고 처벌하기 위한 ‘청명계획’을 입안 작성했고 이들 대상자에 대한 등급별 ‘청명카드’ (체포카드)도 만들었다고 밝혔다.

청명계획은 1989년 3월 공안정국 조성된 직후인 4월 비상계엄을 발동할 경우 예비검속할 만한 민간인 주요인사들 명단과 함께 대상자의 성향, 자택의 가구 배치, 진입 및 도주 가능 경로, 친인척 거주지, 세세한 인적 사항과 담당 체포조까지 작성해 놓았다. 보안사 3처의 ‘청명 태스크포스’가 작성한 청명대상자 선정과 등급분류는 공안합수부 정책협의회에서 검찰 경찰의 좌익인사 자료 및 보안사의 좌익인사 명단과 등급 등을 참조했다. 1989년 8월 을지훈련 기간에 8개 부대를 선정해 도상훈련까지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1989년 상반기에 공안정국 조성과 함께 계엄령 발동을 예상한 이유는 1987년 12월 대통령선거 유세 때 노태우 후보가 자신이 당선될 경우 중간평가를 받겠다고 공약한 것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노태우는 1989년 3월 중간평가 유보를 발표했다. 당시는 외국어대 임수경이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대표로 평양에서 열리는 아리랑축전에 참석하고 돌아와 체포되는 등 공안정국이 조성되는 분위기였다. 여기에 더해 대통령 노태우가 중간평가 공약을 파기한 것에 대해 국민 분노와 비난이 확산될 경우 계엄령을 선포하고 비판세력을 검거해 제압하겠다는 것이 보안사 청명계획의 내용이었다. 국방부 과거사위원회 발표를 보도한 언론들은 “보안사가 청명계획이라는 이름으로 당시 야당 정치인과 각계 민주화운동 인사들의 체포계획을 세워 사실상 친위 쿠데타를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썼다.¹⁶⁾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대상이던 노무현 김대중 이기택 (A급 분류), 문재인 한승헌 김승훈 문동환 강동규 이효재 씨 등 145명은 1991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보안사가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점을 인정하여 원고들에게 각각 200만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개인들에게는 위자료 200만원 보상판결에 불과했지만 이는 군의 정치개입과 반역사적 친위쿠데타 음모로서 중대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16) 세계일보 (인터넷판), 2007년 7월25일 17:05

양심선언의 윤석양 이병은 2년여 도피생활 끝에 1992년 9월 기무사에 붙잡혀 군무이탈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94년 만기 출소했다. 징역 1년6개월 미만일 경우 그는 부대에 복귀해야 하며 보안사로 다시 들어간다면 어떤 가혹행위가 벌어질지도 알 수 없어 아이러니컬한 형량이었다 할 수 있었다.

대통령 노태우는 중간평가 유보에 대해서가 아니라 보안사 민간인 사찰에 대해 국민 분노가 터지자 보안사 개혁으로 무마하고자 했다. 서빙고분실 폐쇄, 국방장관과 보안사령관 경질, 기무사로 명칭 변경 등을 단행했다. 그후 김영삼 대통령은 기무사령관에 대한 국방장관 예속 지휘권을 정립하고 대통령 독대관행도 폐지했다.

6. 맺음말

- 합법적 폭력관리집단 군부의 과거사 청산

군의 정치개입은 물리적인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한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하는 방법이 전형적이다. 평소 합법적 폭력관리 집단인 군은 쿠데타에 나설 경우 정부청사나 대통령궁을 무력 점거하고 정치인을 체포하는 불법적 폭력 행사로 권력을 창출한다.

보안사의 힘은 통치권자에게 계엄령을 건의하고 군의 정규 지휘체계에 병력 동원을 조연하는 역할에서 나온다. 계엄령이 선포될 경우 합동수사부를 주도하면서 정치인 체포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자체 수사인력으로 직접 수행한다. 1990년 10월 윤석양 이병이 보안사의 민간인사찰을 위한 ‘청명계획’과 계엄령이 선포될 경우 각계의 비판적 인사 1300여명을 체포하기 위해 준비한 청명카드를 폭로한 것이 가장 실증적 사례다. 당시 보안사는 민간인에 대해 단순한 사찰이 아니라 계엄령에 대비해 치밀한 체포계획을 수립했다. 후에 국방부 과거사위원회가 이 사실을 발표하자 언론들은 친위쿠데타 계획으로 해석했다.

보안사의 민간인 주요인사 체포계획은 1980년 5월 전두환 신군부의 내란과정에서도 작동했다. 보안사령관 전두환은 보안사 정보처장 권정달 대령에게 이른바 시국불량 인사 명단 작성을 사전에 지시했다. 이렇게 준비된 명단에 따라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가 결정된 직후인 당일 밤 10시 합수부 보안사가 군대 작전수행과도 같이 신속하게 주요 정치인과 재야 민주화운동자들을 검거한 것이다. 김대중, 문익환, 예춘호, 리영희, 고은 씨 등의 자택을 급습하여 시민학생 소요의 배후조종 혐의로 체포했고 김영삼 씨 등은 가택에 연금시켰다. 그로부터 9년 후 보안사는 똑같은 행태로 청명계획과 청명카드를 작성해 두고 있었다. 보안사의 속성을 반복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보안사의 정치적 친위대 역할은 기무사로 명칭 변경하고 개혁한 후에도 결코 바뀌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박근혜 정권의 기무사도 똑같은 행태를 보였다. 2016년 10월 촛불집회가 빈발하고 2017년 대통령 탄핵절차가 시작되자 기무사가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문건이 공개됐다. 박정희-전두환의 유신군사독재 시기에 흔히 보았던 보안사의 정치적 친위대 역할이 근래에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여론이 대통령과 정부를 압박하고 정국이 불안해지면 보안사가 계엄령 건의를 검토하고 이른바 시국불량 인사 체포계획이나 작성하는 친위대 습성을 버리지 못한다면 군의 정치개입 과거사청산이란 아직 요원하다 할 것이다. 군부도 시민민주주의 정치체제의 일원으로서 모든 정치적 문제에 대해 국민의사에 따르는 민주적 복종의 의무(political obligation)를 철저히 학습하고 체화해야 한다. 사관학교를 비롯한 모든 지휘관 연수교육에 이같은 시민민주주의 학습과정을 필수화해야 할 것이다.

--끝--

<참고 문헌>

- 강성재. 1986. 『참 군인 이종찬 장군』. 서울 : 동아일보사.
 강창성. 1991. 『일본/한국 군벌정치』. 서울 : 해동문화사.
 김재홍. 1993. 『군부와 권력』. 서울: 나남.
 김재홍. 1994. 『군 1 : 정치장교와 폭탄주』. 서울 : 동아일보사.
 김재홍. 1994. 『군 2 : 무기개발 극비작전』. 서울 : 동아일보사.
 김재홍. 1998. 『박정희의 유산』. 서울 : 푸른숲.
 김재홍. 2012. 『누가 박정희를 용서했는가』. 서울 : 책보세.
 김재홍. 2012. 『박정희의 후예들』. 서울 : 책보세.
 김재홍. 2012. 『박정희 유전자』. 서울: 개마고원.
 김재홍. 1999. “한국 군사권위주의 체제(1961~92)가 남긴 유산,” 7월14일 세종연구소 미국 민주주의재단 공동주최 디모크라시 포럼 제1차 국제학술회의 주제발표 논문.
 김재홍. 2011. “절차적 민주주의와 국가 균형발전 파괴한 특혜형 독재정치,” 민주평화복지포럼 정책자료집 『5.16, 우리에게 무엇인가』.
 김재홍. 2020. “김재홍 칼럼 : 남산의 부장들과 정치군벌 하나회,” 매일경제. 2월24일자.
 김재홍. 2020. “김재홍 칼럼 : 5·18광주, 정치군벌 하나회를 생각한다,” 매일경제. 5월15일자.
 김재홍. 2020. “유신선포의 내란 성격에 관한 고찰,” 유신청산민주연대 편, 『박정희 유신독재체제 청산 : 한국 현대사의 망령』. 서울 : 도서출판 동연.
 김재홍. 2020. “박정희의 정치적 유산과 그 청산,” 유신청산민주연대 편, 『박정희 유신독재체제 청산 : 한국 현대사의 망령』. 서울 : 도서출판 동연.
 민주평화복지포럼. 2011. 『5.16, 우리에게 무엇인가 : 박정희 시대의 실증적 역사평가』. 서울 : 민주평화복지포럼.
 유신청산민주연대 편. 2020. 『박정희 유신독재체제 청산 : 한국 현대사의 망령』. 서울 : 도서출판 동연, 2020)
 이한림. 1994. 『세기의 격랑』. 서울: 팔복원.
 임지봉. 2011. “유신헌법과 한국 민주주의,” 10월19일 민주평화복지포럼 학술대회 ‘유신체제, 우리에게 무엇인가’에서 주제발표한 논문.
 장태완. 1993. 『12.12 쿠데타와 나』. 서울 : 명성출판사.
 지병문 김용철 천성권. 2001. 『현대 한국정치의 새로운 인식』. 서울 : 박영사.
 한홍구. 2011. “군사반란 50년, 박정희 시대에 대한 역사 평가,” 민주평화복지포럼 주최 '5.16쿠데타50년 학술대회자료집 출판기념회 및 강연회 자료집.
 71동지회 편, 2021. 『71동지회 50년 기념문집 : 변혁의 시대 1971~2021』. 서울 : 도서출판 동연.

Finer, Samuel E. 1975. *The Man on Horseback*. London : Penguin Books.

Huntington, Samuel P. 1985. *The Soldier and the State : The Theory and Politics of Civil-Military Relati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Janowitz, Morris(ed.). 1969. *The New Military : Changing Patterns of Organization*. New York : The Norton Library.

직선 쟁취로 다시 찾은 민주주의

조종주(강제징집 녹화선도공작 진실규명추진위원회 사무처장)

직선 쟁취로 다시 찾은 민주주의

조종주(강제징집 녹화선도공작 진실규명추진위원회 사무처장)

저는 강제징집 녹화선도공작 진실규명추진위원회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조종주입니다.

저희는 박정희에서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엄혹했던 시기를 청년학생운동으로 맞섰고 국가의 이름으로 가해진 폭력에 맨몸으로 노출되어야 했던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단체는 전두환 시기에 강집된 사건을 중심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유신과 전두환을 연관시켜서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유신청산 민주연대와 같이 활동을 하면서 박정희로부터 시작된 유신이라는 파시즘 체제가 전두환 때까지 연속되어 있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고 본질이 같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의 특징은 국민으로부터 참정권을 박탈하여 대통령이라는 우리의 대표를 직접 선출하지 못하게 한 것이었고 이 참정권 박탈이 국민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고 권력이 마음대로 전횡을 휘두를 수 있게 한 배경이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당시에 박탈당한 권리가 대통령 직선제 외에도 많지만 유신 시대를 상징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대통령 간선제였던 것 같습니다. 86년, 87년 투쟁에서 핵심적인 구호가 직선 쟁취였지요. 물론 직선 쟁취 이후에도 민주세력이 권력을 갖지 못하고 5년이라는 세월을 더 고통받아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직선 쟁취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역사가 진일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신청산과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 진실규명 관련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이승만과 박정희와 전두환 시기를 거치면서 지금까지 국가권력을 빙자한 폭력집단에 의해 발생한 사건들이 모두 본질이 같고 밀접하게 연관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진화위에 진실규명 신청된 사건들 대부분이 본질적으로 같다는 것이지요.

사실, 일제강점기 이후 지금까지 가해 세력들은 껍데기만 바뀌었을 뿐 늘 하나였습니다. 해방 이후 지금까지 77년이 지났지만 과거사가 제대로 청산된 경우가 한 번이라도 있었던가요? 제 짧은 소견에도 가해세력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온존하고 아직도 맹위를 떨치고 있으니 과거사가 청산될 수가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유신체제가 6월항쟁으로 그 막을 내리고 직선 쟁취로 새로운 민주주의가 시작되었음을 알리긴 했지만 그 시작이 새로운 투쟁의 시작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제가 아주 젊은 편에 속하지만 저도 이제 60입니다. 40년 전 선배님들이 아직도 그대로 선배님으로 계십니다. 87년 때 제 나이 스물넷이었습니다. 35년 전입니다. 선배님들과 함께 참 오랜 시간 함께 해 왔습니다. 회한도 있지만 보람되고 자랑스러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선배님들과 함께 새로운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매우 기쁩니다.

개인적으로 민주화를 위해 많은 분들과 함께 살아오면서 가장 보람된 것은 고문이 없는 사회를 만든 것입니다. 저는 이것 하나로도 충분히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봄’을 주도했던 선배님들은 전두환 군사정권의 등장으로 당시의 투쟁이 꽃을 피우지 못했음을 자책합니다. 당시를 주도했던 선배님들의 안타까운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 뒷 세대인 우리가 볼 때 꽃은 피었습니다. 한 번만 핀 것이 아니라 계속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당시의 꽃이 제대로 피지도 못한 채 땅에 떨어져 거름이 되고 자양분이 되어 계속 꽃을 피우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87년 6월 항쟁으로 그 꽃을 피웠고, 91년 투쟁으로 꽃을 피웠고, 2016년 촛불로 그 거대한 촛불을 피웠습니다. 1970년대와 1980년을 살아낸 선배님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87년 6월항쟁도 없었을 것이고 2016년 촛불도 없었을 것입니다. 꽃은 지기 마련이지만 그 꽃은 열매를 맺고, 그 열매는 씨앗이 되어 널리 퍼져나갑니다. 그 씨앗은 때가 되면 다시 싹을 틔우고, 자라서 꽃을 피웁니다. 이 아름다운 순환은 언제까지나 반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행하는 모든 활동의 본질은 우리가 경험했던 불행한 기억을 역사로 세워내기 위한 것입니다. 사필귀정, 오랜 시간이 흘러도 잘못을 저지른 자들은 반드시 그 죄를 물어야 합니다. 그것이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이고 불행한 과거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독일이 나치 청산을 위해 지금까지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듯 우리도 우리 후손들의 ‘다른 미래’를 위해 우리의 기억을 역사로 세워내야 하며 이를 위해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하고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정표가 되기를 자처하며 한발 앞서 어려운 길을 가신 선배님들을 믿습니다. 어렵고 먼 길이지만 우리가 힘을 모아 함께 간다면 결국에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겨울바람은 살을 저밀 듯 매섭지만 때가 되면 봄은 올 것이고 나무들은 꽃들을 피워낼 것입니다. 우리는 그 희망을 선배들로부터 배웠습니다.

선배님들, 고맙습니다.

민주유공자법은 왜 재정되어야 하는가?

이창훈(4.9통일평화재단 사료실장/민주유공자법제정추진단 총괄실장)

민주유공자법은 왜 재정되어야 하는가?

이창훈(4.9통일평화재단 사료실장/민주유공자법제정추진단 총괄실장)

1. 토론문을 작성하게 된 경위

오늘 발표된 발제문과 다른 토론문을 작성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주항쟁의 달 6월을 맞이하여 이 심포지움이 추진된 점을 고려하여 지난 6월 10일에 열린 6월민주항쟁 35주년 국가기념식에서 '민주유공자법 제정없는 국가기념식은 허울일 뿐이다.'라며 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에서 식발식을 감행하였던 사연을 소개하는 것이며,
- 현재 우리가 추진 중인 유신청산법 역시 과거 반민주세력이 저지를 악행을 역사에 기록하여 다시 이 땅에서 군사파쇼집단이 탄생하지 않기를 궁극적으로 원하기 때문에 민주유공자법 제정과 일맥상통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2. 민주유공자법은?

- 1997년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국가폭력으로부터 사망한 사람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유가족들의 투쟁이 시작되었으며, 14대 국회에서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법'과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의 관한 법률'로 변질되어 시행되었으며, 이후 이 두 위원회의 활동이 끝났음에도 국가와 국회는 '민주유공자법' 제정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 현재 보훈처에서는 '민주', '독립', '호국'을 보훈 대상의 영역으로 확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다른 영역과 달리 '민주'영역에서는 '4.19혁명과정에서 희생된 분들'과 '5.18민주화운동과정에서 희생된 분들'만 보훈 대상자로 정하고 있어 다른 영역들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 게다가 지난해 보훈처에서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민주화운동가들을 보훈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에 국민 75.8%가 찬성하여 독립운동 다음으로 그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민주유공자법은 우리나라의 독특한 역사성에 기인합니다. 한국전쟁이후 들어선 정권들

은 분단과 전쟁의 상흔을 교묘히 이용해가며 정권유지를 위해 수많은 국민들을 폭력적으로 탄압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유신헌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폭압적 상황에서도 일부 국민들은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으며 온 몸으로 저항해 왔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저항의식은 지난 2017년 2018년 해를 넘기며 벌어진 '촛불항쟁'으로 계승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독재권력은 더 이상 이 땅에 발붙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 이러한 과정에서 희생당한 분들을 이미 민간진영에서는 매년 6월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를 통해 올해를 포함하여 31년간 모셔왔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이를 외면한 채 '민주화운동관련자'라는 애매한 호칭으로 이들을 대해 온 것입니다.
- 이는 민주화운동가들에 대한 홀대이며, 더 이상 국가의 무책임한 행위에 더는 두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지난해 6월부터는 유가족들이 직접 나서 '민주유공자법제정 촉구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지난해 10월부터는 국회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와 국가는 이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왔으며, 급기야는 지난 6월항쟁 35주년 기념식이 열리던 성공회성당 앞에서 '유가족 회원 일곱분이 식발식'을 감행하였던 것입니다.
- 민주유공자법 제정은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습니다.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하던 전태일의 어머니 이소선 님은 이미 2011년에 사망하였으며, 박종철의 아버지 박정기 님은 2018년에 사망하였고, 이한열의 어머니 배은심 님은 2022년 올 1월에 사망하였습니다. 이제 남은 유가족들도 80을 전후한 고령의 나이어서 언제라도 먼저간 아들과 딸들의 완전한 명예회복을 보지 못한 채 눈을 감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일부 보수세력들은 민주유공자법을 제정하면 마치 큰 혜택이라도 돌아가는 듯한 표현으로 법제정을 반대해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제출된 우원식 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사망자중 대다수가 미혼시절에 사망하였으므로 보훈법에 의한 혜택(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교육 취업 혜택 등)을 받을 처지가 못 되며 부모의 경우도 이미 고령이기에 국가유공자 가족에게 주어지는 혜택도 소액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법제정 추진과정에서 이를 의식한 일부 의원들이 유공자들에게 주는 혜택을 빼고 민주유공자법을 제정하자고 주장도 하지만 그럴 경우 다른 국가유공자들과 달리 민주유공자들만 차별을 받은 엉뚱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유가족들은 이제 올해를 넘겨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21대 하반기 원구성이 끝나면 바로 법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심포지움이 국회에서 열리는 만큼 이 자리를 통해 국회가 더 이상 정치적 상황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자랑스러운 민주화의 역사를 이 나라의 반석위에 올 곧게 새기는 길에 반드시 나설 것을 다함께 촉구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유신청산민주연대

유신청산민주연대 규약(개정안)

1. 명칭 :

유신군사독재(1971.12 국가비상조치선언 - 1987.10 헌법개정)청산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연대기구로서 약칭하여 유신청산민주연대라 한다.

2. 목적 :

본회는 분단상황에서 유신군사독재 시기인 1971-1987년(71.12 국가비상조치 선포 - 87.10 헌법개정) 국회해산, 유사입법기구에 의한 유신헌법과 법령제 개정 긴급조치와 계엄령 및 통치기구를 통해 인권유린과 민주주의를 파괴한 국가폭력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고 피해·저항자의 원상 및 명예 회복을 추진한다. 유엔인권이사회가 제시한 '전환기적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이 되도록 하며 이러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가칭)유신청산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3. 사업 :

본회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아래의 사업을 수행한다.

-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내외 토론회 심포지엄 등의 개최
- 헌정을 유린한 유사입법기구를 통해 제 개정된 법률과 시행령에 대한 조사
- 통치기구(중앙정보부 국군보안사 검찰 경찰 법원 등)의 국가폭력에 대한 진상규명
- 유신시대 피해·저항자의 명예회복과 적절한 배보상을 위한 사회적 합의
-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혁과 다양한 민주시민교육의 실시
- 피해 저항자의 진실을 드러내고 역사적 평가와 자료정리 작업
- 국내외 관련 단체와의 협력과 연대사업
- 기타 목적상 필요한 사업

4. 회원 :

본회의 목적과 취지에 동의하는 단체와 개인을 회원으로 한다. 참가단체는 5인내의 대의원을 통해 회원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가입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이루어진다.

5. 총회 :

본회에 참여한 단체와 개인을 회원으로 하는 정기총회는 년 1회 개최하며 대표단과 운영위원회를 선출하고 2인의 감사를 선출한다. 총회는 대표자회의로 대신할 수 있다.

6. 대표 :

본회는 참여단체와 개인으로 10인 내외의 공동대표로 구성하며 3인 이내의 상임대표를 둘 수 있다. 대표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7. 운영위원회 :

참가단체의 임원 15인 내외로 구성하며 본회의 일상적인 사업과 활동을 관장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1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3인 이내의 부위원장과 회계 및 서기를 선출한다.

8. 고문과 자문위원 :

덕망과 학식을 갖춘 인사를 본회의 고문과 자문위원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선임->위촉한다.

9. 위원회와 사업단 :

본 회의 사업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각종 위원회 또는 사업단위를 구성할 수 있다.

10. 사무국 :

회원단체중 실무역량이 있는 단체를 중심으로 공동사무국을 구성하며 그 중 책임사무국을 선정할 수 있다. 책임사무국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11. 재정 :

본회의 재정은 참가단체의 분담금과 회비 후원금 사업수입으로 한다.

부칙

1. 규약외의 사항은 민주적인 관례에 따른다.
2. 본 규약은 통과되는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창립총회 2020년 5월 28일
일부개정 2022년 2월 15일

유신50년군사독재청산위원회 국회내 조직 및 활동계획안

1. 참가 및 위헌불법 무효선언 조직화 :

- 전현직 국회의원 선언 참가자를 중심으로 유신50년청산위원회(국회)를 확대해 간다.
- 전직+현직 국회의원 1백인 선언 : 불법적인 계엄령을 통한 국회해산과 국회의원 탄압 등 헌정 유린이 진행된 유신군사독재 체제의 위헌 불법 무효화 선언을 추진한다.

2. 연구와 토론 :

- 유신독재기간의 헌정유린과 국가폭력 진상을 조사 연구하는 국회내 포럼을 추진한다. 국회 내 시민정치포럼 등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 국회토론회는 유신청산민주연대 참가단체가 관련 영역을 유신청산관련 주제로 진행하는 것을 포함하도록 한다.
- 6월항쟁 35년 심포지엄(유신군사독재를 종식시킨 6월항쟁 그리고 87년 체제)과 관련행사
- 유신50년청산 심포지엄(유신군사독재 청산을 통한 인권 민주 한반도 평화)과 관련행사

3. 진상조사 :

- 2기 진화위에 피해자 진상조사 요구를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 8대 국회(71.7.26개원-72.10.17 해산)와 10대 국회(79.3.17개원 - 80.5.18 패쇄/해산)의 공백 즉 계엄령 발동으로 무(無)국회(72.10.18-73.3.11/80.10.28-81.4.10)상태에서 이루어진 국회해산과 봉쇄,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와 고문 구속에 대한 조사.

4. 입법활동 :

- 유신청산특별법 제정을 위한 로드맵을 설정해 추진해 간다. 진상규명과 피해,저항자 명예회복을 중심으로 하고 배보상은 장기 과제로 남겨둔다. 3~4월 중 입법발의를 추진한다.
- 유사입법기구(1972년. 비상국무회의 270개, 1980년 국가보위입법회의 189개)에 의해 제·개정된 459개의 법령에 대한 검증작업을 추진한다. 초안을 준비해 연구프로젝트로 추진한다.
- 5.16 군사쿠데타 이후 유사입법기구에 의해 제정된 1008개 법령에 대한 조사 연구.
- 법안 마련을 위한 입법준비워크숍을 1월 하순 개최, 3월 중 입법발의를 추진한다.

5. 역사정리 :

- 인터뷰-유신독재 16년 동안의 피해 저항자(유족포함)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국회의원 참가단체의 추천을 받아 인터뷰하면서 인터넷 등 매체에 소개하고 자료화하고 출판한다.
- 유신올레 통해 유신시대의 헌정유린 국회탄압(고문현장 등)과 민주주의 유린 반평화적 분단 현장 등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면서 결과를 기사화(영상자료화 유튜브등)하도록 한다.

6. 문화행사 등 :

- 유신청산을 위한 문화예술적 접근으로 문학 사진 미술 음악 영상등 여러 분야를 포함하는 연중기획을 준비한다.
- 2022년 연중 기획으로 추진하며, 6월에는 <유신군사독재 16년을 종식시킨 6월 민주항쟁>, 10월에는 <유신50년 청산 민주축제> 행사기획, 특히 <국회유린전> (박정희의 72년 국회해산과 전두환의 80-81년 국회폐쇄 해산)을 집중 조명한다.

7. 홍보활동 :

- 홈페이지 제작 ycdn.or.kr 제작중 웹자보 미디어 자료실을 활용한다.
- 언론 홍보를 위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협업과 기획을 준비한다.
- 공동대표단 의원실을 비롯해 국회방송등 국회내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한다.

8. 사무국 :

- 국회 중심으로 활동하는 방식과 사회공간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
- 실무는 유신청산민주연대가 담당하되 국회공동대표단 의원실과 협력해 진행한다.

유신청산민주연대

유신청산민주연대

-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진실규명추진위원회 /
-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
- 늦봄문익환목사기념사업회 /
- 민주·인권·평화를 실천하는 긴급조치사람들 /
-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
- 서울민예총 /
- 이한열기념사업회 /
- 자유언론실천재단 - 동아투위·조선투위 /
- 장준하정신선양회 /
-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 /
- 전태일재단 /
-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
- 평화어머니회 /
- 평화와 통일을 사랑하는 예술인들 /
- 한국작가회의 /
- 4.9통일평화재단 /
- 70년대민주노동운동동지회 - 청계피복·동일방직·원풍모방·콘트롤데이터·YH 노동조합 외 /
- 71동지회 /
-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
- NCKK(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외

유신청산민주연대 참가단체 및 임원진(2022년 1월 현재)

-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상임대표) / 긴급조치사람들(이사장 유영표)
- 강제징집녹화선도사업진실규명위원회 / 늦봄문익환목사기념사업회(이사장 송경용)
-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이사장 문정수) / 서울민족예총친총연합회(이사장 손병휘)
- 자유언론실천재단(이사장 이부영)-동아투위 조선투위 80해직언론인협의회
- 장준하정신선양회(회장 김주태) /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회장 허진수)
- 전태일재단(이사장 이수호) / 촛불계승연대(상임대표 송운학)
- 평화와 통일을 사랑하는 예술인들의 모임(대표 차주환) / 한국작가회의(이사장 이상국)
- 4.9통일평화재단(이사장 문규현) / 70민주노동자회(회장 임현재) - 청계 동일 원풍 YH 노동조합외
- 71동지회(고문 김재홍) / NCKK인권센터(이사장 홍인식)

고문

- 김경천 전 국회의원
- 박중기 49통일평화재단 이사
- 배기운 전 국회의원, 71동지회 부회장
- 이부영 전 국회의원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 이해학 겨레살림공동체 이사장
- 임진택 예술인
- 최 열 환경재단 이사장

공동대표

- 김재홍 상임 / 71동지회 고문
- 고은광순 긴급조치사람들 부회장
- 박현옥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상임대표
- 박순희 70민주노동운동동지회 부회장
- 성한표 조선투위 위원장
- 송운학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
- 신현수 한국작가회의 사무총장
- 안승운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이사장
- 허 욱 동아투위 위원장

운영위원

- 이대수 위원장 / 긴급조치사람들 이사
- 김선홍 촛불계승연대 집행위원장
- 김중기 부위원장 /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상임이사
- 박강호 자유언론실천재단 상임이사
- 송경동 한국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장
- 이광희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 사무처장
- 이창훈 4.9통일평화재단 자료실장
- 임현재 부위원장 / 70민주노동자회 회장
- 조봉훈 부위원장 /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고문
- 조재현 서울민예총 기획실장
- 조종주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진실규명추진위 사무처장
- 김종채 유신청산민주연대 역사·자료정리위원장
- 송병춘 유신청산민주연대 법률기획위원장

공동사무국 : 이대수 박강호 신미주 이창훈 임현재 조재현 조종주(간사)

사무실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353, 연씨오피스텔 1102호 Tel 070-4121-1330

Email : ycdn21@naver.com www.ycdn.or.kr

